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집필진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김수영 변호사(유니세프한국위원회)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김희진 변호사(전 국제아동인권센터)
박선영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신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울다함)
이상희 변호사(전 한국여성변호사회)
이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시선)

감수

김민선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2017년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개정된 법령과 제도 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발간사



서울지방법원변호사회는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인권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회원분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4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포럼 및 세미나,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개최, 각 분야별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방임 등의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고, 2020년 10월, 16개월 아이가 양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목숨을 잃은 대표적인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의 법률지원을 위하여 2017년도에 발간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 개정판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변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아동학대사건을 진행하면서 변호사가 겪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사건의 피해 아동에 대한 수사절차, 재판절차 등의 법률적 조력에 대한 방법뿐만 아니라 아동의 삶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보호 및 상담, 치료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상 받을 수 있는 지원,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업데이트된 유관기관, 아동권리협약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제작을 위해 노력해주신 집필진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힘써주실 변호사님들과 관련 단체 활동가분들께 본 매뉴얼이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 정 욱

CONTENTS

제1장 아동학대의 의미와 유형 ----- 1

1. 아동학대의 정의 ----- 3
 - 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3
 - 나. 국제사회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 5
2. 아동학대의 유형 ----- 6
 - 가. 신체학대 (Physical Abuse) ----- 6
 - 나.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 8
 - 다. 성학대 (Sexual Abuse) ----- 9
 - 라.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 10
3. 보호자의 범위 ----- 11

제2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의 이해 ----- 13

1. 아동학대 대응체계 업무 개관 ----- 15
2.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 내 각 업무주체의 역할 ----- 17
3. 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 18
4. 아동학대 사건진행 과정에서의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 19
 - 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필요 ----- 19
 - 나. 아동학대 사건처리 업무단계에서의 피해자 변호사의 업무 ----- 20

제3장 수사단계 ----- 23

| | |
|---------------------------------|----|
| 1. 수사절차 개관 ----- | 25 |
| 가. 사건의 개시 ----- | 25 |
| 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현장출동 ----- | 25 |
| 다. 피해아동 진술 ----- | 26 |
| 라. 아동학대행위자 조사 ----- | 26 |
| 마. 검찰송치 ----- | 26 |
| 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27 |
| 사. 법원 내지 가정법원 송치 ----- | 27 |
| 2. CCTV 등 증거확보의 문제 ----- | 28 |
| 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와 열람·제공 ----- | 28 |
| 나.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 | 29 |
| 3. 수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사의 지정 및 권한 ----- | 34 |
| 가.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 | 34 |
| 나. 피해아동 국선변호사의 권한 ----- | 34 |
| 4. 사건의 인지 ----- | 35 |
| 가. 아동학대 신고 ----- | 35 |
| 나.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을 때의 조치 ----- | 37 |
| 5.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 | 39 |
| 가.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 | 39 |
| 나.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 | 42 |
| 6. 경찰단계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 | 53 |
| 가. 긴급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 | 53 |
| 나. 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 | 54 |
| 다.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불복 ----- | 56 |

| | |
|-----------------------|----|
| 7. 검사의 조치 | 57 |
| 가. 결정전 조사 | 57 |
| 나. 검사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 57 |
| 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 58 |
| 8. 수사진행 과정에서의 Q&A | 58 |

제4장 재판단계에서의 절차 65

| | |
|-----------------------------------|----|
| 1.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재판절차 | 67 |
| 2. 아동보호재판 | 68 |
| 가. 아동보호사건 | 68 |
| 나. 구체적 절차 | 68 |
| 3. 형사재판 | 71 |
| 가. 공소 제기 및 공판절차의 진행 | 71 |
| 나. 영상녹화 된 피해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관련 유의점 | 71 |
| 4. 아동학대범죄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제도 | 73 |
| 가. 심리의 비공개 | 73 |
| 나. 신뢰관계인 동석 | 73 |
| 다. 피해아동의 변호사 선임 | 74 |
| 5.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재판절차에서 피해아동 변호사의 역할 | 74 |
| 가. 재판절차 참여 | 74 |
| 나. 의견진술 | 74 |
| 다. 재판장의 소송지휘 등에 관한 이의신청 | 75 |
| 라. 기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 | 75 |
| 마. 배상명령제도의 활용 | 76 |

| | |
|---------------------|----|
| 6. 아동학대 관련 판결 양형 사례 | 77 |
| 가. 신체적 학대 | 78 |
| 나. 정서적 학대 | 80 |
| 다. 성학대 | 81 |
| 라. 유기·방임 | 82 |
| 7. 재판절차 진행단계에서의 Q&A | 84 |

제5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93

| | |
|---|-----|
| 1.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 95 |
| 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 개관 | 95 |
| 나.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기구 및 인력 | 97 |
| 2. 아동학대로 「아동복지법」상 보호의뢰가 된 경우 아동보호절차 | 101 |
| 가. 개관 | 101 |
| 나. 보호조치(제15조) | 102 |
| 다. 일시보호조치(제15조 제6항) | 104 |
| 3. 공권력 개입에 의한 아동분리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106 |
| 가. 일시분리조치 확대에 대한 논란 | 106 |
| 나. 다른 국가들의 아동보호 제도 : 아동분리 및 원가정복귀를 중심으로 | 107 |
| 다. 시사점 | 112 |
| 4.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절차 등 | 113 |
| 가. 실무상 어려움 | 113 |
| 나. 법률상 원가정복귀절차 | 114 |
| 다. 실무에서의 조사과정 및 일반적인 소요기간 | 114 |

제6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제도 117

1. 형사절차상 피해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 119
 - 가.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119
 - 나. 국선보조인 121
 - 다. 진술조력인 122
 - 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124
 - 마. 증거보전의 특례 124
 - 바. 증인지원시설 운영 124
2. 행정절차상 피해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 125
 - 가. 신분조회 등 조치 125
 - 나. 가족들에 대한 지원 125
 - 다. 비밀전학 125
 - 라.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126
 - 마.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 상담 126
 - 바. 다양한 지원센터 126
 - 사. 의료비 환급(성폭력 피해아동) 및 의료 지원 128
 - 아. 긴급지원(가정폭력 피해아동) 128
 - 자. 복지서비스 연계 129
 - 차. 주택지원제도(가정폭력 피해아동) 129

제7장 아동학대 유관기관 131

1. 아동권리보장원 133
 - 가.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 133
 - 나. 주소 및 연락처 133
2. 일시보호시설 134
3. 아동보호전문기관 134
 -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134
 - 나. 주소 및 연락처 135

| | |
|---------------------------------|-----|
| 4. 학대피해아동쉼터 | 139 |
| 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역할 | 139 |
| 나. 주소 및 연락처 | 139 |
| 5. 해바라기 센터 | 139 |
| 가. 해바라기 센터의 역할 | 139 |
| 나. 주소 및 연락처 | 140 |
| 6. 여성긴급전화 1366 | 143 |
| 가. 여성긴급전화 1366의 역할 | 143 |
| 나. 주소 및 연락처 | 143 |
| 7.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144 |
| 가. 성폭력상담소 | 144 |
| 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145 |
| 8.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146 |
| 가. 가정폭력상담소 | 146 |
| 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147 |

제8장 특수한 경우의 아동

| | |
|------------------------------------|-----|
| 1. 이주배경 아동 | 151 |
| 가. 이주아동의 개념 | 151 |
| 나.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의 어려움 | 152 |
| 다. 이주아동 학대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Q&A | 157 |
| 2. 장애아동 | 157 |
| 가.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 157 |
| 나. 장애 유형에 따른 고려사항 | 159 |
| 다. 장애인 수사 및 재판과정 절차 지원제도 | 165 |

| | |
|--|-----|
| 3. 입양 | 170 |
| 가. 입양제도 개관 | 170 |
| 나. 입양기관의 아동보호에 관한 책무 | 172 |
| 다.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에 있어서의 법적 대응 조치 | 173 |
| 4. 출생신고 | 175 |
| 가. 출생신고되지 아니한 아동 | 175 |
| 나. 현행 출생신고제도 | 177 |
| 다. 아동학대사건 진행 중 출생신고 절차 | 182 |
| 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자국선변호사로서의 지원 | 184 |

제9장 아동권리협약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185

| | |
|------------------------------|-----|
| 1. 아동권리협약의 의의 | 187 |
| 가. 아동권리협약 | 187 |
| 나. 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 | 188 |
| 2.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 190 |
| 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 190 |
| 나.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 194 |

| | |
|--------------|-----|
| 〈부록〉 | 195 |
| 유엔아동권리협약(영문) | |
| 유엔아동권리협약(국문) | |

제1장

아동학대의 의미와 유형

》 제1장

아동학대의 의미와 유형

1 아동학대의 정의

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는 국내법상 「아동복지법」에서 그 정의 규정을 찾을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합니다)」은 아동학대를 금지하면서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에게 하여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손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나. 국제사회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학대 및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 속에는 아동 및 아동의 양육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 계획의 수립과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방지책, 학대사례를 확인·보고·조치·조사·처리·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범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확인하고, 아동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 아동폭력 보고서」(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를 작성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위 보고서를 통해 가정, 학교 및 교육현장, 사법제도, 노동환경, 지역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폭력, 이러한 폭력이 전통과 관습 또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현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채택된 일반논평¹⁾ 제8호에서 「신체적 처벌 및

1)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은 유엔의 국제인권법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조약기구(아동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등)가 해당 조약 내용 및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특별히 중요한 주제에 대한 포괄적 해석지침을 담고 있는 일종의 유권해석으로서, 국제인권조약의 이해와 실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권리(CRC/C/GC/8)²⁾는 아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예로서 제시하였습니다. 2002년 「폭력과 건강에 대한 세계보고」에서도 아동폭력을 ‘아동에게 위협하거나 실제로 가해지는 의도적인 물리적 힘 또는 권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수행되며 그 결과로 인해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해를 끼치는 것³⁾’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는 국내규정상 구체적으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하에서 각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기로 합니다.

가. 신체학대 (Physical Abuse)

(1) 정의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2) General Comment No. 8: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article 19, 28(2) and 37, *inter alia*)

3) E. G. Krug et al. (eds.),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p.5.

판결)”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예

구체적으로는 ①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②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③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음, 물에 빠트림 등), ④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⁴⁾ 최근에는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훈육으로 인한 경우이고 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력은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그 체벌의 물리적 강도가 아동을 기준으로 하여 과도할 경우 「아동복지법」 상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례 상 ① 아동의 만 4세 아동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⁵⁾ ② 생후 약 8개월의 아동이 탑승한 유모차를 앞으로 강하게 약 23회 흔드는 행위,⁶⁾ ③ 훈육을 이유로 아이를 난타하는 행위⁷⁾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참조

5) 춘천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945 판결

6)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합664 판결

7) 대구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노527 판결

나.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1) 정의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서학대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합니다.⁸⁾

(2) 구체적인 예

정서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①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② 잠을 재우지 않는 것, ③ 별거벗겨 내쫓는 행위, ④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⑤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⑥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⑦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⑧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⁹⁾

판례상 ①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보게 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¹⁰⁾ ② 보육교사가 체벌을 이유로 3세 아동을 다른 원생과 떨어져 있게 하여 소외감을 주는 행위, 식사를 하게하고,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고,

8)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9)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참조

10) 춘천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단651 판결

수저통을 던져 복도에서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게 하는 행위,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빼앗아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¹¹⁾ 등 역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예라고 할 것입니다.

다. 성학대 (Sexual Abuse)

(1) 정의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됩니다.¹²⁾

(2) 구체적인 예

아동에 대한 성학대의 구체적인 예로는 ①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②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③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④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⑤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¹³⁾

11)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2526 판결

1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라.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1) 방임

(가) 정의

아동학대에서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복지법」 상 ‘방임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44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임은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물리적 방임이란 ①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②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③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④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¹⁴⁾ ⑤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¹⁵⁾

교육적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¹⁶⁾ 그리고 의료적 방임이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에게

13)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참조

14) 인천지방법원 2016. 6. 9. 2015고단6533 판결

15)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참조

16)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합니다(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혈중으로 귀의 변형이 오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방치하는 행위 역시 또 다른 방임에 의한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¹⁷⁾

(2) 유기

(가) 정의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방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구체적인 예

유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①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②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③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등이며, 보호자가 1세의 아동을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집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유기하고 도망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¹⁸⁾

3 보호자의 범위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즉, 이때의 “보호자”는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친인척,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17) 창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2965 판결

18) 울산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고단4028 판결

교사 및 학원 강사, 아동의 통학로 차량기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호자의 개념을 방문한 친척이나 부모의 애인과 같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양육·교육·보호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며(협약 제18조 제1항), 학교교사 및 학원 강사는 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활동 중 또는 교육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어 아동(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통학로 차량기사 역시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어,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는 보호자라 할 것입니다.

제2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의 이해

》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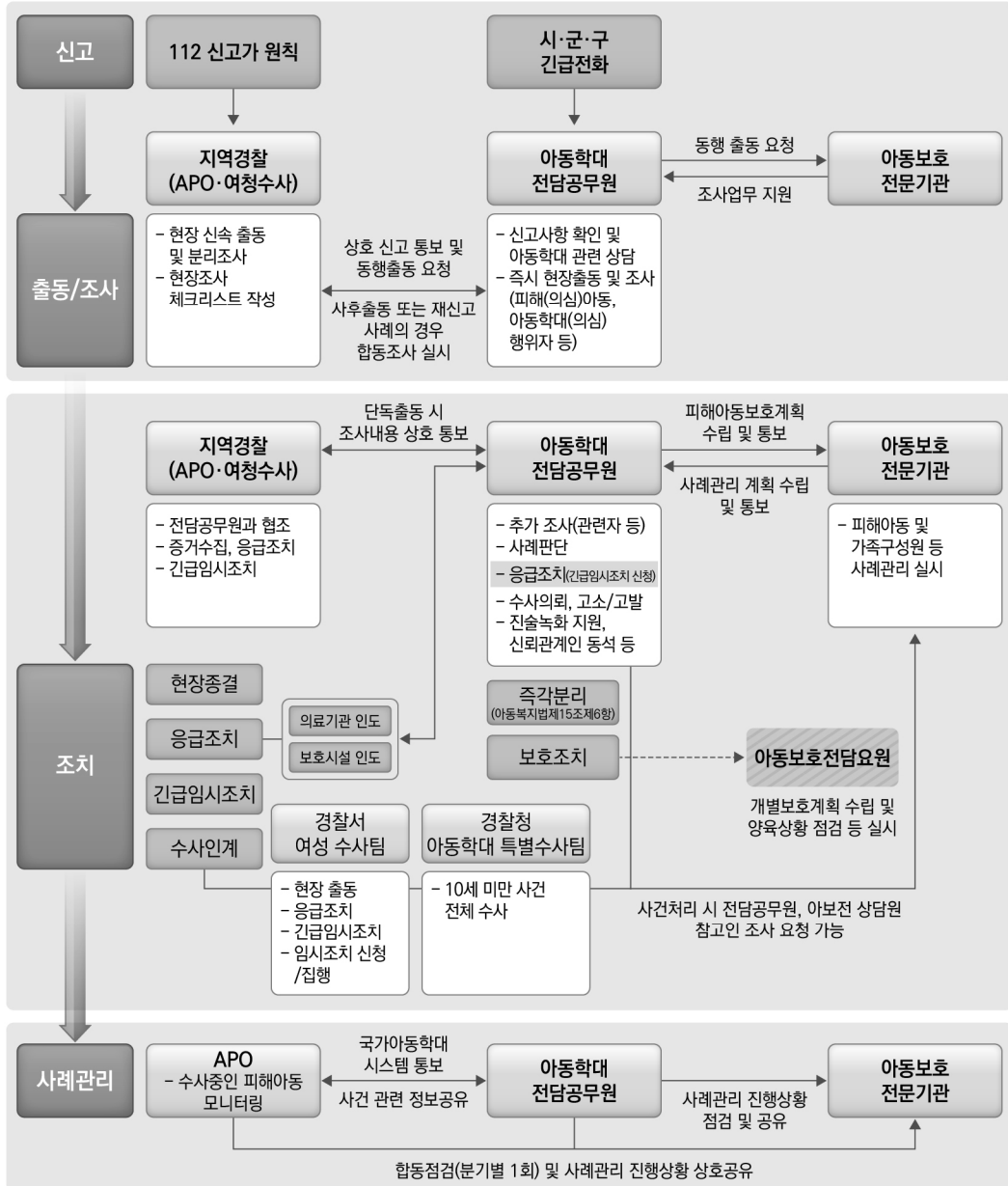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의 이해

1 아동학대 대응체계 업무 개관

2000년도 초반 「아동복지법」을 통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범하였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사례관리를 공공이 아닌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2020년 초,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서 20년간 민간이 담당해 온 아동학대 조사와 응급보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서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아동보호체계의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아동학대의 업무처리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은 아래 [그림1]과 같습니다.

[그림1] 아동학대 업무처리 흐름



* 21.6.30.부터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보호조치의 적절성 심의

기본적인 업무의 흐름을 서술하자면, 먼저 신고 접수가 된 사건(원칙적으로 112로 아동학대 신고가 일원화되었으나, 비공식적으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소속 부서의

전화 및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전화로 들어오는 신고도 포함)에 대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출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경찰과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해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를 통해(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가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복지법」상 즉각분리(「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일시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를 신청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아동 및 사건에 관련된 기초정보를 조사하고 향후 조사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및 판단과는 별개로 경찰은 이 사건을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례판단이 끝나면 해당 사례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내져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아동에 대한 지원 등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2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 내 각 업무주체의 역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각 업무주체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2]와 같습니다.

[그림2] 아동학대 사건처리 과정 내 업무주체별 역할



3 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업무 흐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아직 변화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여러 직원이 하던 업무의 큰 축이었던 조사 및 사례판단 업무가 갑자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이관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출 새도 없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요원의 기준에 도달한 지방자치단체가 드문 상황입니다. 배치된 전담인력들은 일반 사회복지직렬에서 일반 행정 업무를 보다가 아동학대전담인력으로 이동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아동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밤낮없이 출동을 해야 하고 학대행위자로부터 강도 높은 민원을 받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변호사의 업무는 피해자 변호사 지정 및 선임의 근거가 ‘아동학대처벌법’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대리인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변화는 피해자 변호사로 하여금 이전의 형사사건의 대리인으로서의 소극적인 조력을 넘어, 아동학대 업무 전반에서 적시에 적절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전방위적 역할도 가능하도록 그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역할의 확대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지침에 따르면 이런 역할 중 일부는 보수청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업무체계 개편이 이어지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필연적으로 피해아동의 보호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피해자 변호사의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4 아동학대 사건진행 과정에서의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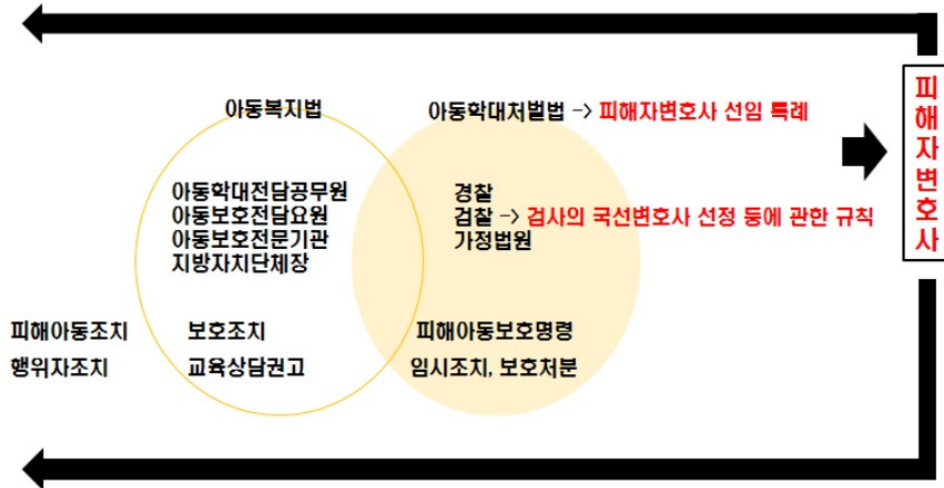
피해자 변호사 업무의 확대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하나의 법률과 통일된 절차, 특정한 책임주체하의 일관된 결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각 업무주체의 결정에 따라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활용¹⁹⁾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규율이 분절²⁰⁾되고, 업무주체별로 대응의 방향을 다르게 결정될 수도 있다²¹⁾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흐름 속에서 아동보호의 공백과 업무주체 간의 소통의 간극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변호사가 적절히 개입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향의 의견을 개진하며 대응 방향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19) 아동을 가정 외 분리보호 함에 있어,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정처분으로서 제15조의 보호조치를,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서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각 발할 수 있으며, 두 조치는 중첩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한 조치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조치가 각하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 2016. 5. 10. 선고 2015누67955판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입소한 피해아동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시까지 보호위탁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입소 근거가 아동복지법 15조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이후 임시조치를 거쳐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며(아동학대처벌법, 동부사건), 피해아동에 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절차로서 응급조치 이후 일반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동처)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제15조)를 통한 분리보호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아동의 보호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을 진행하게 되므로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개입 및 이를 통한 가정의 통합적 개선도모에 한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1)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이 불처분 결정이 되거나,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는데 아동의 분리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 장의 판단과 가정법원의 판단이 서로 상충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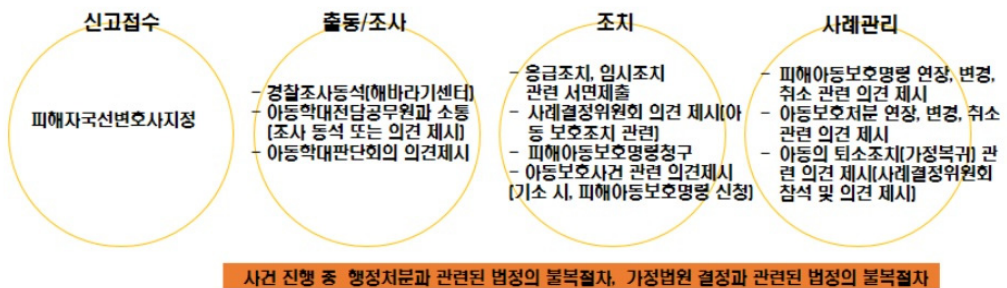
[그림3] 피해자 변호사 업무의 확대가능성



나. 아동학대 사건처리 업무단계에서의 피해자 변호사의 업무

아동학대 사건처리 업무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4] 아동학대 사건처리 업무단계별 피해자변호사의 역할



피해자 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된 각종 조치의 청구, 연장, 변경, 취소, 종료 등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 외에, 「아동복지법」상의 절차와 조치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를 불복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보호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불복하는 업무,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서면을 제출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업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아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동 위원회의 소위원회인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변호사로서 참여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적절성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당연히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매뉴얼은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당사자 및 행위자가 아닌 아동의 보호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개편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중 이와 관련된 실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아동의 의사를 대변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로서, 현행법상 해당 아동의 법률조력이 가능한 것은 오직 국가가 지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법률조문만을 근거로 아동의 형사절차상의 형식적 대리인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 절차에서 아동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의 아동학대처벌법상 절차는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되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큰 틀에서 보면 「아동복지법」상 피해아동을 위한 조치들이 더불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의 조사를 거치게 되고, 그 후에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포함된 지자체 내의 아동보호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동학대 여부가 첨예한 사안의 경우 이러한 아동학대 판단회의에 참고할 수 있는 서면을 피해자 변호사로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인지 판단이 된 이후에는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서 사례결정위원회가 개최되게 되는데,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 여부는 아동

의 복리를 위하여 중요한 결정이며, 분리 여부 및 어디로 보호될지 등은 형사사법절차상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 변호사는 사례결정위원회에 아동의 변호사로서 의견을 제출하고, 결정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향후 피해아동보호계획과 사례관리 계획 등이 수립됨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각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아동의 가정복귀를 촉구하는 의견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담요원(민간전문인력, 제13조 제4항 이하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 합니다)에게 전달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열리게 될 사례결정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차원의 제 절차들은 행정처분 또는 그와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절차의 흠결이나 판단에 있어서 현저한 재량의 일탈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장

수사단계

》 제3장

수사단계

1 수사절차 개관

가. 사건의 개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으므로(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아동학대는 신고, 인지, 고소에 의하여 사건이 개시됩니다.

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현장출동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1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치에 따라 피해아동은 시설로 옮겨지는 등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피해아동 진술

피해아동은 피해사실을 국선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술조력인 참여하에 해바라기센터 등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술 녹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향후 수사과정에 대해 통지를 받고자 할 경우 전화, 팩스, 이메일 중 하나를 선택하면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3조).

라. 아동학대행위자 조사

피해아동의 진술 전이나 진술 후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 방식과 같습니다.

마. 검찰송치

경찰에서 피해아동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아동학대행위자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기소의견일 경우에는 검찰송치결정(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을 하고,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견일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결정내용을 진술시 선택(전화, 우편, 이메일)한 방법에 따라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송하여 줍니다.

송치받은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그리고 검사는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동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 해당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검사는 결정 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5조 제1항).

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견일 경우에 해당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5의6), 위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다만, 이의신청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 법원 내지 가정법원 송치

검사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여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학대에 해당하지만 처벌보다는 행위자의 성행 및 환경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통하여 형사법원에 기소합니다.

2 CCTV 등 증거확보의 문제

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²²⁾ 와 열람·제공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여²³⁾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²⁴⁾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²⁵⁾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생략)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2) 어린이집 CCTV의무설치와 관련하여,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자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CCTV를 통하여 교사와 아동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수집된다는 점에서 학부모·아동·교사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23) 어린이집 외의 유치원, 학원 등의 경우 CCTV 설치의무가 없고 일반적인 열람권한도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에 등장하는 정보주체 전체의 동의를 받아 확인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24) 어린이집 CCTV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어 불필요하게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치에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25) 다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CCTV가 아닌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 경우, 해당 영상을 60일간 보관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나.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보호자, 관계공무원(보육담당공무원, 수사·재판기관 등), 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관계공무원 및 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의 열람요청의 경우

관계공무원과 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의 열람요청의 경우 해당영상을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파기하였거나, 열람요청이 해당기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업무수행과 관계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어린이집 원장은 즉시 영상을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2) 보호자의 열람요청의 경우

보호자의 열람요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열람을 거부하기로 한 경우에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 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그들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²⁶⁾를 한다는 명목으로 즉시 열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즉시 영상정보를 열람하려면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시하거나, 관계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즉시 열람이 가능한 기관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26) 영상자료에 정보주체 외에 제3자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열람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는 제15조의4 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6. 8.>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²⁷⁾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4 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4 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²⁸⁾〉

Ⅵ. 열람 및 제공

1. 열람의 요청

-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중략)

- 어린이집 원장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열람 장소와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 함

(생략)

2. 열람

(중략)

-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영상자료에 정보주체 외에 제3자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열람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님

(생략)

3. 열람의 거부

-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서면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열람 등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략)

27)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합니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4.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²⁹⁾

(중략)

- 법 제1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관계 공무원³⁰⁾ 등이 열람 요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생략)

5.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 법 제15조의5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9조의4 제4항에 따른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사항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어린이집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중략)

-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열람 요청시에는 공문서, 신분증 등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요청 내용이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생략)

(3) CCTV 영상제공 요청의 경우

CCTV 영상의 열람과 달리 영유아보육법령은 CCTV 영상의 제공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CCTV 영상을 제공 받으려면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³¹⁾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공으로 보아 수사기관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합니다.

28)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야 하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지침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시판에 2016. 3. 29. 게시되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29) 관계 공무원 등과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을 따로 항을 나누어 서술하고 있으므로, 앞의 1~3항의 내용은 보호자의 열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0) 해당 조문을 해석하면, 영유아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수사·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31) 아동학대 의심영상을 열람한 다음 후속조치를 위하여 해당 영상을 증거로서 제공하는 것은 어린이집 CCTV 설치의 목적인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에 부합하는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6. 자료의 제공 등 제한**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영유아보육법령에는 영상자료 제공에 관한 조항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6. (생략)
7.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사의 지정 및 권한

가.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제2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제도’의 ‘1. 형사절차상 지원 방법’ 중 ‘가.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부분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합니다) 제27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그런데 피해아동에게 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②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③ 아동학대중상해죄, 상습아동학대죄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나. 피해아동 국선변호사의 권한

- ① 긴급임시조치신청권(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 ② 임시조치청구요청권 및 의견진술권(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 ③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참여신청권(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36조)
- ④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참여신청권(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37조)
- ⑤ 비디오 등 증거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에 대한 의견진술권(「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40조).
- ⑥ 증거보전청구요청권(「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41조)
- ⑦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 출석 및 의견진술권(「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 ⑧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권(「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 ⑨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권(「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취소 및 처분 종류 변경 신청권(「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제2항)

4 사건의 인지

가. 아동학대 신고

(1) 신고권자

-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
- ②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누구나(「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 ③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³²⁾

- 32)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고소 특례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 가능하며(「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 제1항),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고소 가능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 제2항),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 제3항).

(2) 신고기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3) 신고방법

- ① 112 및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전화를 거는 방법
- ② 각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4) 신고자에 대한 법적보호조치

(가) 불이익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

(나) 신고자 비공개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한, 영상물촬영,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소송 진행의 협의, 신변안전조치 등의 보호가 가능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3).

나.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을 때의 조치

(1) 현장출동의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1항).

(2) 현장출동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① 피해아동의 보호, ② 「아동복지법」 제22조의 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3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6항).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7항).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범죄장소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문을 강제로 열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지 않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출동 시에는 반드시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해야 할 실무상의 필요가 있습니다.

(3) 조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제9조(출석·진술 요구),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제21조(의견제출)를 준용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5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가.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1) 대상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 등”이라 한다)

(2) 조치권자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 조치의 필요성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4) 조치내용(「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전문)

- ①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②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의 격리
- ③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후문).

(5) 통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2항).

(6) 기간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4항).

(7) 응급조치결과보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5항).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6항).

(8)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7항).

(9) 사법경찰관리의 출입

사법경찰관리는 ①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또는 ②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8항). 이와 달리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지 않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시에는 반드시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해야 할 실무상의 필요가 있습니다.

나.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1) 개념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아동을 친권자의 보호 아래 그대로 놔두는 것은 학대가 재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해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 제1항).

(3) 청구권자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결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4) 보호명령의 내용(「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 ①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②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③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④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⑤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⑥ 피해아동을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 ⑦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⑧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⑨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⑩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위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3항), 판사가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4항).

(5) 임시후견인의 선임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7호) 및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이 때 판사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피해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3항, 제23조 제2항), 법원이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사실을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

람은 피해아동 소유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3항, 제23조 제4항), 피해아동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해아동을 대리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3항, 제23조 제5항, 민법 제949조).

(6) 보조인의 선임

(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조인 선임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³³⁾ 판사는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아동·아동학대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8조).

피해아동에게 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②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9조).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8조).

33) 국선변호인이 보조인으로 활동하게 경우에 대해서는 제2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제도 > 1. 형사절차상 지원 방법 > 가.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 보조인으로 선임되는 (국선) 변호인 부분 참조

(나)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 선정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9조 제2항).

(7)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 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제1항).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 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제3항).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제3항).

(8)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할 수 없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

(9) 임시보호명령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제4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 그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급박한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서에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부분을 함께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0) 이행실태의 조사

관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3조).

(11) 심리

법원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4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4조).

(12) 항고와 재항고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1항).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2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를 요청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4항).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취지 기재례 : 접근금지(법 제47조 제1항 제1·2·3호)³⁴⁾〉

청 구 취 지

1.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주거지로 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피해아동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3.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주거지로 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4.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취 지

1.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피해아동들 및 피해아동들이 재학 중인 학교 및 입소한 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피해아동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문자메세지, 음성통화 등 포함)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명한다.
 3. 피해아동들을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한다.
 4.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들 및 피해아동들이 재학 중인 학교 및 입소한 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5.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문자메세지, 음성통화 등 포함)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명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4) 관할법원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후 결정시까지 피해아동보호를 위하여 임시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이를 함께 청구하도록 합니다(법 제52조 제1항).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취지 기재례 : 보호위탁, 친권정지(법 제47조 제1항 제4·7호)〉

청 구 취 지

1.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위 기간 동안 피해아동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선임한다.
 3.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한다.
 4.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위 기간 동안 피해아동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선임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취 지

1.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학대아동쉼터에 보호위탁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3. 피해아동의 임시후견인으로 ■■■시장을 선임한다.
 4.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위탁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취지 기재례 : 치료위탁(법 제47조 제1항 제5호)〉

청 구 취 지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국립서울병원에 치료위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취 지

1.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피해아동의 재학중인 학교 및 입소한 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피해아동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3.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한다.
 4. 피해아동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서울가정법원관할 수탁의료기관에 치료위탁(전문의학 진단으로 그 필요성이 확인된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포함)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취지 기재례 : 가정위탁(법 제47조 제1항 제6호)〉

청 구 취 지

1.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피해아동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문자메세지, 음성통화, 이메일 등 포함)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명한다.
 3.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권△△에게 가정위탁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취지 기재례 : 친권자의 의사에 갈음하는 결정(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청 구 취 지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2017. 6. 28. 국립서울병원에서 시행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적 처치(전문의학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응급수술, 입원 약물치료)를 승낙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취 지

친권자(피해아동들의 모 강●●(주민등록번호 : 7707**-28***** / 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시 ○○구 ○○동 102번지 / 본 : 晉陽), 피해아동들의 부 이▲▲(주민등록번호 : 7104**-0000000 /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구 △△동 304번지))의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피해아동들[이■■■(출생연월일 : 2010. 02. 03. / 출생장소 : ◆◆여성병원), 이□□(출생연월일 : 2013. 05. 20. / 출생장소 : ◇여성병원)]의 출생신고에 있어서 필요한 행위를 승낙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변경취지 기재례(법 제50조 제2항)〉

변 경 취 지

이 사건에 대하여 2016. 6. 29. 에 한 “피해아동을 2017. 6. 28. 까지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 한다.”라는 결정을 “피해아동을 2017. 6. 28. 까지 국립서울병원에 치료위탁한다”로 변경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연장 청구취지 기재례(법 제51조 제1항)〉

연 장 취 지

피해아동에 대하여 2017. 6. 28. 까지 한 치료위탁을 2017. 9. 28. 까지 연장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³⁵⁾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신청인

| | | | |
|--------|--|------------|--|
| 성명 | | 사건관련 신분 |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주소 | | 전자우편 | |

□ 경찰 결정 내용

| | |
|------|---|
| 사건번호 | - |
| 죄명 | |
| 결정내용 | |

□ 이의신청 이유

| |
|--|
| |
|--|

□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 | |
|----|-----------------------------|
| 종류 | 서면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
|----|-----------------------------|

신청인

(서명)

소속관서장 귀하

35) 경찰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고객센터>민원서식>수사탭에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6 경찰단계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가. 긴급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1) 대상

아동학대행위자

(2) 필요성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3) 조치권자

사법경찰관

(4) 신청권자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5) 조치내용(「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항)

- ①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②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6) 긴급임시조치 후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2항),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3항).

나. 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1) 대상

아동학대행위자

(2) 필요성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청구권자

검사가 법원에 청구

(4) 신청권자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신청

(5) 조치내용

- ①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②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④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⑥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⑦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제1항).

(6) 임시조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권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제3항).

(7)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사법경찰관이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하

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제12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불복

제19조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6조의 보호처분, 제40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1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5조 제1항). 법원이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며(「아동학대처벌법」 제45조 제2항),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5조 제3항). 임시조치·보호처분의 항고·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처벌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5조 제4항).

7. 검사의 조치

가. 결정전 조사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5조 제1항). 검사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25조 제2항), 보호관찰소의 장이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그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5조 제3항).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5조 제4항).

검사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5조 제5항)

나. 검사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①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② 아동학대행위

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③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④ 원가정보 호의 필요성, ⑤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처분 | 처분의 결과 |
|------------|------------------------------------|
| 공소제기 | 형사처벌 |
| 아동보호사건송치 |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학대 관련기관에서 상담, 교육(「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
|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 |

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1) 기소유예 처분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제기가 가능합니다.

(2) 혐의없음 처분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다룰 수 있으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던 사건의 경우에는 항고에 대해서 각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수사진행 과정에서의 Q&A

Q.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경찰에서 진술녹화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친권자인 친모가 피해아동의 진술을 막고 있다면, 피해아동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나요?

A : 피해아동이 범죄피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할 수 있는 권리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의 전제로서 피해아동의 기본권적 측면에서 보장받아야 하지만,

일선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고, 또 동석한 경우에 한하여 진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아동이 법정대리인 없이 진술할 경우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피해아동의 피해진술 의사가 명확하고 법정대리인 동석에 준할 정도의 피해아동의 지위가 보장되는 경우까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피해아동이 진술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피해아동의 의사능력과 연령³⁶⁾ 등에 비추어 피해아동이 진술할 능력이 있고, 또 피해아동 본인이 진술하기를 원한다면 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친모가 피해아동의 진술을 막는 일련의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있어서 강요 또는 정서적 학대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면 경찰을 통하여 임시조치 상의 접근금지나 법원을 통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상의 접근금지를 받아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피해아동과 상담 중 피해아동이 과거에도 학대행위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아 병원
에서 진료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해당 병원에 피해아동의 의무기록을 요청하였
는데, 병원 측에서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
게 대응해야 할까요?

A :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성년자라도 진
료기록 사본 발급 사무를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
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

36) 실무상 만 14세 이상의 피해아동은 단독으로 심리 상담을 받거나,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이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의 반대해석을 근거로 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실제 문제되는 것은 만 14세 미만의 피해아동의 진술에 있어서 친권자가 진술을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으로서 진술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고, 이후에도 친권자의 협조가 기대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하여 친권을 정지시키고 임시후견인을 선정하여 임시후견인의 권한으로 피해아동이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아동의 진술을 방해하는 친권자에게 인정되는 아동학대행위가 무엇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피해아동이 진술할 아동학대범죄의 방조 등으로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환자 스스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이 요청할 수 없고 14세 이상은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환자의 14세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통상 10세) 환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³⁷⁾ 만약 피해아동이 사무처리 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통상 10세 미만), 영장을 통하여 확보하거나, 법정대리인을 설득하여 임의제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피해아동보호명령상 친권자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의무기록 발급의 동의를 얻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유치원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할 수 있나요?

A : CCTV 설치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만 부과된 것이고, 「유아교육법」을 따르는 유치원은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설치한 CCTV를 열람하게 하여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CCTV를 설치한 유치원은 원아들을 비롯한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열람시키는 것 또한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CCTV를 열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를 제공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재 2016. 7. 28. 2015헌마1059 : (종략)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의하여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이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이 적용되므로 CCTV 설치가 법에 의하여 강제되지 않습니다.

37) 보건복지부 2020. 7. 20.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220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2020. 7. 20.자 등록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개정 안내(수정)" 게시물 참조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5476

Q.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며, 신고의무 해태 시 처분은?

A : 법률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 즉 피해아동의 말이나 행동 또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통상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여야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³⁸⁾ 신고의무자는 복수가 될 수 있으나 각자가 신고의무를 지므로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관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상급자에게 학대인지사실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상급자를 통하여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나 상급자가 신고를 약속하고는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상급자에게 고지한 신고의무자의 과실이 없다면 해당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해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학대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학대행위자나 피해아동에 관한 정보 및 학대의 정도나 내용, 학대장소나 시간 학대사실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상세하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이들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학대사실에 대한 진술만으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자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게 되어 신고의무불이행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을 지며, 과태료의 부과 주체는 신고의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장이 됩니다.

Q.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가 내려졌고,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기소가 결정되어 형사재판으로 회부되게 되었을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를 위하여 따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나요?

A : 임시조치는 아동보호사건을 전제로 내려지는 것으로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그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

38) 아동학대의 의심이 전혀 없음에도 신고하는 경우 무고의 죄책을 짐은 물론입니다.

서 기소 시점부터 피해아동에 접근금지 조치는 없어진 것이므로, 학대행위자가 구속되지 않은 이상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히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한 접근금지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Q.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였는데도, 서면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 주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A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은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불송치이유가 담긴 결정서를 요청해서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요청하여 이의신청 전에 불송치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검찰이 직접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피해아동보호명령시 임시보호명령은 얼마정도 시간이 걸리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언제 청구하는 것이 좋은가요?

A :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당시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10일 정도가 지나면 임시보호명령을 발송해 줍니다(서울가정법원 기준). 따라서 법 제 14조, 제19조의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기 전 미리 청구해야 결정의 불비로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아동복지법」위반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의 관계는?

A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이 다릅니다. 「아동복지법」은 제72조, 제17조의 위반행위를 각 처벌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6조(상습범)를 각 처벌한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도 다르다. 만약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Q.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사건의 관계는?

A :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 27조). 이는 형사사건의 절차에 특례를 둔 것으로 사건번호는 2021동버0000입니다. 피해아동보호사건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47)는 점에서 아동보호사건과 달리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사건의 사건번호는 2021동처0000입니다.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법 제54조)는 법률에 따라 법원은 보통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 접수되면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하고, 조사명령을 한 후, 검찰에서 아동보호사건이 송치되면 병합하여 심리를 하게 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기일에 1번만 출석하면 됩니다.

제4장

재판단계에서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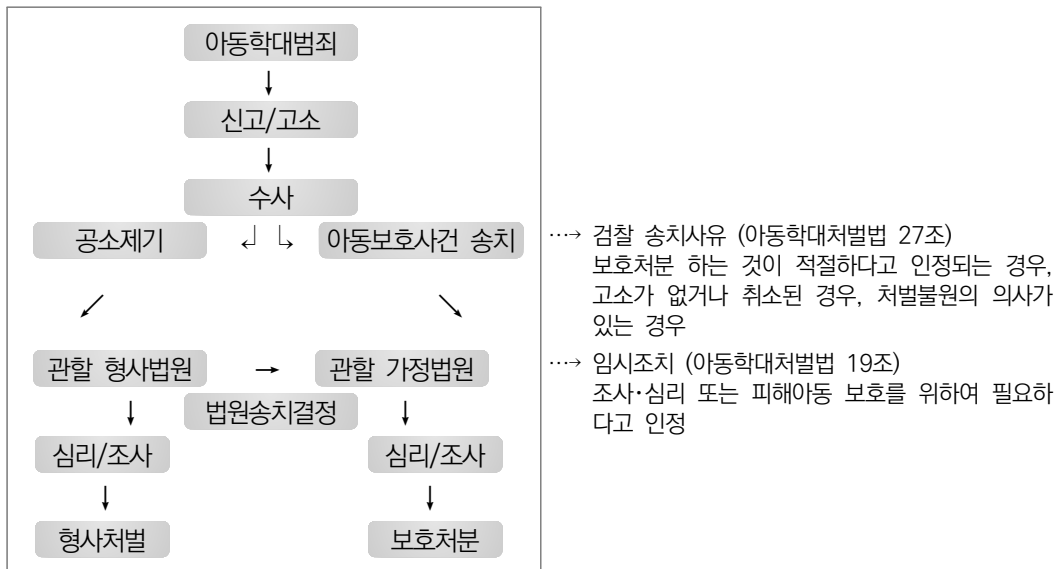
》 제4장

재판단계에서의 절차

1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재판절차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검사 또는 법원의 아동보호사건 송치에 따라 아동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5] 아동학대범죄 재판절차의 개략적인 흐름도



2 아동보호재판

가. 아동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원가정보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및 제27조).

나. 구체적 절차

(1) 사건 접수 및 관할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검사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송치에 의하여 접수되고(「아동학대처벌법」 제28조, 제29조),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8조).

(2) 공소시효의 정지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3) 임시조치

아동보호사건의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단독 또는 병과하여 내릴 수 있습니다.

[표1]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유형 및 내용

| 구분 | 임시조치의 종류 | 기간 및 연장 | 불이행시 제재 |
|-----|---|-------------------|------------------------------|
| 제1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개월 (2차례 연장가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제2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2개월 (2차례 연장가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제3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2개월 (2차례 연장가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제4호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2개월 (1차례 연장가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제5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2개월 (1차례 연장가능) | - |
| 제6호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2개월 (1차례 연장가능) | - |
| 제7호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2개월 (1차례 연장가능) | - |

(4) 심리

아동보호사건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 또는 이송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38조,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심리 기일은 보통 보조인 선임 이후 1회로 종결되고, 종결된 당일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피해아동이 심리기일에 진술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33조,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5) 처분의 결정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 처벌법」 제36조 제1항 각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표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유형 및 내용

| 구분 | 보호처분의 종류 | 기간 및 시간제한 | 불이행시 제재 |
|-----|--|---------------------|------------------------------|
| 제1호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1년 (최대 2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제2호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1년 (최대 2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제3호 |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1년 (최대 2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제4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200시간 (최대 400시간) | - |
| 제5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1년 (최대 2년) | - |
| 제6호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1년 (최대 2년) | - |
| 제7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1년 (최대 2년) | - |
| 제8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1년 (최대 2년) | - |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33조). 따라서 보호처분이 내려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6) 불복절차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5조).

3 형사재판

가. 공소 제기 및 공판절차의 진행

검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학대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나. 영상 녹화된 피해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관련 유의점

(1) 피해아동의 진술내용 및 조사과정 촬영 및 보존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이 준용되므로,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할 때에는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아동의 진술은 공판준비 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아동이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은 단순위헌이 결정되었습니다³⁹⁾).

(2) 예외 및 이에 대한 변호인의 조치 필요성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일반 형법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나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녹화된 피해아동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될 때의 죄명부터 면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법조의 상이함으로 영상 녹화된 피해아동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직접 피고인을 대면하면 심리적 부담감과 공포감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그간의 심리치료 등으로 사건 내용을 지우려던 아동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함

39)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9. 법률 제11556호로 전 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신문권 보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고,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화적 대안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단순위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순위헌이어서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의 진정성립 인정이 불가하므로, 속히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니다. 법정이라는 딱딱한 공간에서 아동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횡설수설하기도 합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형사소송법 제163조의 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피고인의 퇴정(형사소송법 제297조) 등 필요한 조치를 재판장에 신청함으로써 피해아동의 보호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아동학대범죄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제도

가. 심리의 비공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심리는 피해아동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31조). 법상 임의적 비공개로 되어있으나, 피해아동이 공개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해아동의 피해사실 또는 신상정보가 노출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신뢰관계인(피해아동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이 가능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34조).

다. 피해아동의 변호사 선임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5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재판절차에서 피해아동 변호사의 역할

가. 재판절차 참여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아동보호사건의 심리기일 및 일반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아동학대행위자(피고인), 행위자의 변호인(보조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나, 피해아동의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일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나. 의견진술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피해아동을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33조,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아동보호사건에서는 심리기일에, 일반형사사건에서는 공판기일에 피해의 정도 및 결과, 보호처분 또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고,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의견진술의 신청을 하여 지정된 의견진술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 재판장의 소송지휘 등에 관한 이의신청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따라서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심리의 비공개 신청, 피고인의 퇴정, 진술조력인의 참여 및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무리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2차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재판부에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기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

(1)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로서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아래와 같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2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친권제한 조치의 촉구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동학대범죄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이는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사유가 되므로,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924조, 940조).

만일, 검사가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

게 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데(「아동학대처벌법」 제9조 제2항), 피해아동의 변호사도 피해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하거나 청구를 요청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에게 보호자의 부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호자가 피해자를 지지하지 않아 피해아동이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가해부모 또는 친척 등이 피해아동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이 겪은 피해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진술을 할 것을 설득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피해아동이 가해자와 가해자를 보호하거나 방관하는 가족을 피해 안전하게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동은 집을 떠나 보호시설로 가는 경우 낮은 환경에 소외감을 느끼거나 분리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국선변호사는 피해아동에게 앞으로의 보호과정 및 형사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피해회복 단계까지 피해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친권상실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의 상태를 살펴서 친권상실청구의 법률적 요건을 검토한 후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배상명령제도의 활용

(1) 부양에 필요한 금전, 직접적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배상

아동보호사건이 아동보호재판으로 처리될 경우, 법원은 아동보호사건의 아동보호재판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아동의 신청에 의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이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7조,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2) 배상명령

아동보호사건이 일반형사사건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피해아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합니다)에 의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 중 일부가 제외되며,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부양료가 포함되지 않고, 위자료가 포함되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배상명령은 가집행 선고가 가능하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1조 제1항,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소송촉진법」 제34조 제1항).

다만, 배상명령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 배상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부당한 합의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1조 제2항,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소송촉진법」 제34조 제2항).

6 아동학대 관련 판결 양형 사례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양형 사례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 알림마당 > 자료실 > 연구자료 중 “2017 - 2019 아동학대사건판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판례집에 언급되어 있는 몇 가지 판결을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다만, 오늘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더불어 양형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신체적 학대

(1) 뺨을 1회 때린 행위

피고인은 피해아동(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아동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선고 : 벌금 600만원,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11. 2. 선고 2016고단873 판결)

(2) 씻기려고 하자 울며 발버둥 치는 아동을 발로 차 넘어뜨린 경우

피고인은 피해아동(3세)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아동이 바닥에 소변을 본 후 양발로 그 소변을 밟으며 장난치는 아동을 발로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려 아동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선고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대구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고단2980 판결)

(3)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머리를 때리고 찬물을 온몸에 뿌린 행위

피고인은 피해아동 A(7세)와 피해아동 B(5세)의 부의 동거녀로 피해아동들을 보호·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아동 A가 말을 하지 않고 우울해 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4회, 머리를 3회 때렸다.

2014년 12월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우울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한다며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욕조 안에 들어가게 한 후 샤워기를 틀어 찬물을 1-3분 정도 피해아동의 온몸에 뿌렸다.

2015년 1월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부친 산소에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와 피해아동들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이후 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가게 한 후 샤워기를 틀어 찬물을 피해아동들의 온몸에 뿌렸다.

- **선고 :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전주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1225 판결)

(4)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상체를 흔들고 강하게 잡아당긴 행위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2세)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거칠게 잡아 앉히고, 아동의 상의 팔 부위를 잡아 옷이 늘어날 정도로 강하게 수차례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점심을 먹지 않고 투정을 부리며 운다는 이유로 아동의 양팔을 잡아 자리를 이동시키고, 이어 아동의 발목을 잡아 피고인이 앉아있던 곳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아동의 양팔을 잡아 멍이 들게 하였다.

선고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단569 판결)

(5) 어린이집 교사가 손으로 아동의 팔과 목을 잡아끌어 목 피부 겉면에 상처가 나게 한 행위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1세)이 울면서 저녁을 먹지 않고 자꾸 움직인다는 이유로 4-5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 부위 또는 상의 목 부분을 잡아끌어 목 피부 겉면에 손상을 가했다.

선고 : 벌금 300만원(광주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노1257 판결)

(6) 유치원 교사가 아동의 양쪽 뺨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굵은 자국이 남게 한 경우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이고, 피해아동은 유치원의 원아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교실 안에서 산만하게 행동하여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피고인의 앞에 앉게 한 다음 피해아동의 양쪽 뺨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아동의 얼굴에 굵은 자국이 남게 하였다.

선고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광주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노2712 판결)

나. 정서적 학대

(1) 장기간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한 행위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의붓 자녀들인 피해아동 A(여, 17세)와 B(여, 14세)에게 “네 엄마가 걸레라는 것을 알아라”고 말하고, 그 후에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술에 취해 귀가하여 아내와 다투면서 피해아동들에게 “저런 것이 인간이나, 인간도 아닌 년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후에도 아내와 다투던 중 피해아동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에게 “인간같지도 않은 년들, 내 집에서 나가라, 쓰레기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아동들이 듣는 상태에서 “내 자식들도 아니니까 잡아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선고 : 벌금 500만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1367 판결)

(2) “창밖으로 집어던진다”며 위협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아동(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장난감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밖으로 집어던진다!”라고 위협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피해아동에게 “아빠와 이혼할거야. 진작 할 걸.”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너는 네 방에서 자. 안방에서 자지 말고. 자는 동안 엄마랑 동생을 죽일거야.”라고 겁을 주었다.

선고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명령(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단569 판결)

(3) 아동에게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한 행위

피고인은 피해아동(9세)의 친모이다. 피고인과 배우자는 평소에도 피해아동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죽는다거나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외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자살을 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나와 피해아동에게 “혼자서는 못 죽겠다. 엄마랑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동종의 범죄로 이미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선고 :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2. 19. 선고 2019노264 판결)

(4) 교직원이 장애아동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고 몸무게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

피고인은 중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종사하였던 학교직원으로, 척수성근위축증으로 지체장애 1급인 피해아동(13세)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의 입 부근에 반복하여 손가락을 꺾꺾 눌러 가져다 대며 억지로 먹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지원실 방에 눕힌 후 피해아동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었던 교사들에게 “피해아동이 밥을 너무 많이 처먹어서 무거워서 도저히 못 들겠다.”라고 언어적 모욕을 하였다.

선고 : 벌금 100만원(광주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노749 판결)

다. 성학대

(1)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잡은 행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피해아동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아동 위에 엎드려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손으로 아동의 성기를 잡았다.

선고 : 벌금 700만원,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7노3476 판결)

(2)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팔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행위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피고인은 통학버스 안에서 피해아동(6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혀로 그림과 글씨를 쓰게 하고, 피고인도 혀로 피해아동의 팔을 핥고 피해아동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또 다른 피해아동(3세)의 손을 끌어당겨 바지 위 혹은 팬티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팬티를 입은 채 피해아동의 입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아동(2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를 하게 하였다.

선고 :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광주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136판결)

(3)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다른 원생 앞에서 알몸을 노출시키게 한 경우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평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버릇을 가진 피해아동(6세)을 훈육하겠다고 아동의 팔을 잡아끌어 세운 후 갑자기 아동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를 무릎 아래로 내려 다른 원생들 앞에서 아동의 알몸을 노출시켰다.

선고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8. 선고 2018고단736 판결)

(4)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셔틀버스에 탈 때 보보를 하게 한 경우

피고인은 셔틀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아동(12세)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자이다. 피해아동이 평소보다 늦게 셔틀버스에 탑승하자 아동에게 “볼 보보”라고 말하여 아동이 마지못해 피고인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자, “한번 더”라며 말하여 아동에게 피고인의 볼에 보보하게 한 후, “보보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취지로 말하며 아동의 볼에 보보를 하였다.

선고 : 벌금 200만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수원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노3768 판결)

라. 유기·방임

(1) 출산 후 영아를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속에 넣어두고 간 행위

피고인은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같은 날 20:18경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 출산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렵고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00건물 옆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속에 아이를 넣어두고 갔다.

선고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노653판결)

(2) 신생아를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행위

피고인 A는 동거하던 피고인 B의 아기를 임신하여 산부인과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하였다. 피고

인 모두 나이가 어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아동의 양육이 어려워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를 찾았다. 이들은 생후 2일인 피해 아동을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하였다.

선고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명령(수원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1894판결)

(3) 자녀들끼리만 다른 주거지에서 따로 지내게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피해아동 A(11세), B(10세), C(8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약 7개월에 걸쳐 자신의 자녀들인 피해아동들은 그들끼리만 따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였고, 자녀에 대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선고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3. 14. 선고 2018노4 판결)

(4) 2-3도 화상을 입은 자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입양자녀인 피해아동(5세)이 집 안의 싱크대 위에 있던 뜨거운 끓물이 담긴 컵을 잡다가 피해아동의 얼굴과 몸 부위에 끓물을 쏟아 얼굴, 목, 어깨, 손바닥 등에 2-3도 화상을 입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상처 부위를 식염수로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이는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

선고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074 판결)

(5)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경우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의 친부모로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동이 취학연령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입

학시키지 않았다.

선고 : 피고인 A에게 집행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고단5791 판결)

7 재판절차 진행단계에서의 Q&A

Q.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로 선정된 경우 변호사의 대리권은 당해 심급에 한정되는 것인가요?

A : 국선변호사의 선정기간은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사임하지 않는 한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입니다. 즉, 아동학대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까지, 국선변호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보조인이 된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이 확정된 때까지, 위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 국선변호사로서 피해아동을 위한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재판 진행 중 아동학대행위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경우 피해아동 변호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피해아동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대리하여 합의를 하는 때에는 미성년자가 합의의 의미에 대하여 이해하고 스스로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에 대한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아동 본인의 의사와 피해아동 부모의 의사나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 피해아동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학대행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공탁을 신청하여 공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학대행위자가 피해자공탁을 위하여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알아낸 것이라면 당사자 동의 없는 인적사항 수집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Q. 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2개월간의 임시조치가 있었는데,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에 그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아동보호사건재판 진행 중인 현재에도 여전히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접근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접근금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의 임시조치는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조치이며, 그 수사단계에서는 해당 임시조치를 연장하는 외에 동일한 아동학대범죄사실로 다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동보호사건재판이 개시되고 심리 중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재판단계에서의 임시조치로서 법 제19조를 근거로 하여 다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 재판단계에서 행해진 해당 임시조치를 연장하는 외에 동일한 아동학대범죄사실로 다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보호사건 심리 중의 임시조치는 청구권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직권으로만 행하는 것으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의 신청은 판사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법 제47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 접근금지를 청구하도록 합니다.

Q. 아동보호사건 재판의 결과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이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고소를 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A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아동학대처벌법 제33조) 다시 공소가 제기될 경우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로 인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경우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 제33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하여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은 불처분결정이 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처분결정 이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Q. 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가 가능한가요?

A :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기소여부, 보호처분 여부와 연계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가정법원은 동일한 아동학대범죄사실이 전제된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재판에 대하

여 서로간의 진행상황을 참고하려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는 참고한다는 것일 뿐 학대행위자에 대한 내사종결, 불기소처분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법원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호처분과 내용적으로 중첩⁴⁰⁾되지 않는 특유의 피해아동보호명령⁴¹⁾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행위자의 조치와 별개로 발하여질 것이 요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분리되어 있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다른 보호자가 있어 따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불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실무상 친권자에 의한 경미한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으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 제8호의 상담위탁 처분만 이루어지고, 피해아동을 별도로 원가정과 분리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한 아동학대인데 피해아동이 뒤늦게 피해사실을 밝히며 아동학대행위자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가능한가요?

A :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전제로 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범죄의 성립요건과 시간적 한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동학대가 위 법률의 시행 전에 범하여 진 것이라면, 「형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는 외에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그 아동학대사실 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

| 40) | 보호처분 (법 제36조) | 피해아동보호명령(법 제47조) |
|-------------------|---------------|------------------|
| 격리·접근금지 | 제1항 제1호 | 제1항 제1호·제2호 |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제1항 제2호 | 제1항 제3호 |
| 친권·후견인 권한행사 제한·정지 | 제1항 제3호 | 제1항 제7호·제8호 |

- 41)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피해아동보호명령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다. 다만, 과거 아동학대사실이 있었고 그 사실로 인하여 현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쳐 아동의 복리를 해하는 지경에 이르러 아동이 고통스러워한다면 이것 자체가 새로운 정서적 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실제사례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친부에 의한 강제추행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친부가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확정됨. 그런데 이후 친부가 다시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하여 피해아동과 같이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피해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친부와 격리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및 피해아동의 시설보호를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받은 사례.

Q.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범죄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곧 출소 예정인데, 따로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선고가 없었습니다.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출소한 이후 자신을 찾아와 보복을 하거나 기타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나 발생할 경우 아동학대범죄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가능한가요?

A : 아동학대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발생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예방적 피해아동보호명령(접근금지 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아동이 현재에 느끼는 두려움 등이 「아동복지법」위반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정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 자체를 아동학대범죄로 구성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내용 중 보호위탁, 연고자 위탁 등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아닌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행정처분)로서 같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명령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에 위 보호조치를 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사례 : 삼남매에 대한 친부의 아동학대(신체, 정서학대, 방임, 죽은 시신을 보여주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 등)로 친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피해아동들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친모 및 친척들이 끊임없이 시설보호 중인 피해아동들에 연락 및 면담을 시도하고 있음. 그 사이 삼남매 중 장남이 성년이 되어 보호자로서 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며, 친모와 친척들이

전하는 소식에 비추어 출소 후 친부가 동생들의 친권의 다시 행사할 것이 예견되는 바, 이에 친부에 대하여 출소 후 피해아동들에게 접근할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

Q. 피해아동을 보호할 친인척 등 적절한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친구 집을 전전하거나 친권자가 부재한 원가정에 홀로 방치되는 등 위험이 있어,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명령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아동이 시설의 입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⁴²⁾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하여지는 법원의 명령이므로, 피해아동이 입소를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고,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9조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등본을 위의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서 집행지휘·집행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전에 충분히 피해아동과 소통하여 의사를 확인·설득하도록 하며, 자의 입소가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면,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 중에 미리 조사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집행지휘를 내려줄 것을 요청을 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설득이 실패할 경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42)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들 중에는 이처럼 피해아동이 스스로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할 여건이 되지 않는 보호자가 무리하게 아동을 계속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피해아동에게 소아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치료위탁을 청구한 결과 「피해아동을 000병원에 치료위탁 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면 이로써 입원치료가 가능한가요?

A : 치료위탁의 내용으로는 통원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치료위탁”의 문구만으로 당연히 입원치료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청구시에 청구취지상으로 명확히 “입원치료”를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재판 중 전문의의 진단을 비롯한 구체적인 입원 필요성을 소명하여 “입원치료”가 명시된 결정서를 받도록 합니다. 다만, 피해아동보호명령상 치료위탁기관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7조에 따라 이미 법원에서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곳만을 의미하므로, 그 외의 치료기관에서 피해아동의 치료를 하고자 한다면, 친권자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9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하여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해아동 치료를 위하여 일정부분 부담하는 비용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⁴³⁾

Q. 수급자로 지정된 피해아동의 수급비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시중은행에서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권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로서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 피해아동보호명령 중 제9호상의 친권자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으로서 통장을 개설하는 행위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그 결정서를 시중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시중은행에서는 해당 결정서가 거듭 사용될 우려 등을 이유로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결정서를 요구하므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과 미리 협의하여 구체적인 결정서의 문안을 만들어 청구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결정서 상에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할 시중은행명, 체결할 예금거래계약의 종류, 예금거래계약 체결일시” 등이 명시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심판규칙」상의 집행지휘도 명확히 받도록 합니다.

43)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7조 제6항

법원은 제1항의 수탁기관에 그 집행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청소년증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은행거래에 있어서 공적신분증의 역할을 합니다. 은행에 따라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은행거래가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피해아동이 만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이러한 청소년증으로서 신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은행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미성년자 본인이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Q.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재학대의 우려가 있음에도, 시설 입소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아동이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친구의 부모도 피해아동이 원한다면 피해아동을 데리고 있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아동 친구의 부모가 법률상 권한 있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나요?

A : 피해아동의 보호·양육·교육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후견인 지정에 따르는 절차는 매우 까다로우므로, 이러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것으로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제6호상의 연고자 등예의 가정위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8조는 가정위탁의 수탁 연고자를 선정함에 있어 연고자의 직업, 소득, 아동학대 등 전력, 가정환경과 피해아동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미리 연고자의 의견을 상당한 방법으로 듣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실무는 위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에 연고자를 출석시켜 판사의 면전에서 가정위탁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견서에만 연고자의 가정위탁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가정위탁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일선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통하여 해당 사례의 친구 부모가 일반가정위탁의 요건을 확인받고 교육을 받은 후 해당 센터에서 법원으로 추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실제사례 : 친인척, 위와 같은 친구의 부모, 친구의 친언니, 학교 내 상담교사, 오랫동안 피해아동과 함께 일해 온 가게 사장님에게 가정위탁 명령이 내려 온 바 있음

제5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 제5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는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한 축에 해당합니다. 아동 학대사건은 사법절차 대응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체계와 함께 고려할 때 보다 피해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 전반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기구 내지 인력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보호절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 개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나아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4조 등). 이와 같이 국가는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 아동이 부모나 일차적인 양육자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⁴⁴⁾ 원가정양육 원칙은 아동보호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보호대상아동’은 학대피해 아동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제15조의3).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을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양육하거나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입소시키는 경우,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없는 한 아동과 「민법」 제779조⁴⁵⁾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합니다(제15조의5).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가정복귀,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하며, 연고자가정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도 있습니다(제16조).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44) 유엔총회 결의안(2009),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이하 ‘A/RES/64/142’), para. 155.

45)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제16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와 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합니다(제16조의2).

아동학대의 경우 사법절차 과정에서 개입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변호사, 판사 등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2020년 10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사건의 신고접수 및 상담·조사, 응급보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담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사례관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상황을 점검하면서 아동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하며,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4호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양육환경 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무를 집니다(제15조의4).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됩니다(제15조의2).

나.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기구 및 인력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2조). 사례결정위원회는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을 제외하고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심의할 수 있으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간주합니다(제12조 제1항).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사항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군·구 118개에 292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⁴⁶⁾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46) 2021. 1. 19.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심으로-’, 별첨자료, 12.

「아동복지법」 부칙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2022. 9. 30.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는 경우에도 2023. 9. 30.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3) 아동보호전담요원(민간전문인력, 제13조 제4항)

아동보호전담요원(민간전문인력, 이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설치 당시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2020년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민간전문인력”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설치사항이며, 담당하는 역할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2.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3.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4.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수행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정한 근무경력이 있는 것을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정부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2020년 281명보다 243명 늘려 2021년 524명으로 증원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⁴⁷⁾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13조 제5항).

47) 2021. 4. 15. 아시아경제, “정부, 아동보호 전담요원 60% 증원...아동학대 전문 콜센터 운영”,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1516334537971> (2021. 7. 19. 최종확인)

(4) 기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로 하여금 시설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대안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을 위해 역량을 갖춘 모니터링 기관을 설립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 아동의 양육, 보호, 처우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⁴⁸⁾ 현재 아동(혹은 어린이, 청소년)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비상근·상근 형태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과 달리 아동보호 전 과정에서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제13조)과 아동위원(제14조)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의 경우 필수적 설치사항이 아니며, 2017년 기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배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25%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⁴⁹⁾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해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제2항).

48)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9), 일반논평 제12호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할 권리'(CRC/C/GC/12), para. 97.

49) 이상정 외(2018),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

2 아동학대로 「아동복지법」상 보호의뢰가 된 경우 아동보호절차

가. 개관⁵⁰⁾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 신고는 112(경찰)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미배치 지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하게 됩니다. 이때,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 학대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중점이 있습니다. 반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학대 피해아동 및 원가정의 상황 및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원가정을 지원하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학대피해아동에 관한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 종결 등을 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보호조치 종결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절차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표3] 아동보호 수행 인력별 역할

| 업무단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
|---------------------|---|--|
| 1단계 (상담, 조사, 사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현장출동(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요청) • 응급조치(학대행위자 긴급임시조치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일시보호 시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지원 • 친부모 및 아동상황점검 |
| 2단계 (보호계획 및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 시군구 사례회의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전 상정 |
| 3단계 (보호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모니터링 •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상황점검 • 원가정의 보호기관 모니터링 • 원가정 지원 |
| 4단계 (보호조치 종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종결점검 및 종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조치 종결점검 및 종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전상정 |

50)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0. 9.), 2020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38.

| 업무단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
|---------------|-----------|----------|
| 5단계 (사후관리) | | • 사후관리 |

| 원가정의 보호기관 | |
|---|--|
|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사례관리)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 시·군·구 사례회의 참석 •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연계 • 양육상황점검 협조 • 원가정 지원(부모교육, 지원 등) • 사후관리(가정방문) 협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출동 동행요청 시 동행출동 및 조사지원 • 사례관리계획 계획 수립 및 제공 • 시·군·구 사례회의 참석 •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연계 • 양육상황점검 공동업무 수행 • 사례관리 종결점검 및 종결 •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 • 사후관리(가정방문) 공동수행 |

※ 이 외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원가정의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사례관리 중 협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조 요청 및 정보 공유 등 가능

나. 보호조치(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즉,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공공의 책무를 강화하면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은 공공(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팀 등)만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30일부터 입양상담 절차 또한 변경되어, 보호자(친생부모 등)의 입양 관련 상담은 입양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⁵¹⁾

51)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안내] ‘21. 6. 30.부터 입양상담 절차가 변경됩니다.”,
<https://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053&bbsId=1021&nttSn=2637&cataGori=&tabName=> (2021. 10. 10. 최종확인)

1.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 제1호 및 제2호⁵²⁾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조치)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가정위탁)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보호조치는 아동 및 보호자 상담과 지도를 통해 보호자 가정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에 대리양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원가정 복귀나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이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시설보호,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제3호부터 제6호까지)가 이루어진 후에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⁵³⁾ 2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해야 하며,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2세 미만의 유기 아동은 성분의 창설 후 가정위탁 보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⁵⁴⁾

52)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53) 보건복지부, 2020 아동분야 사업 안내 1, 3.

- ①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 보호자 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에 대리 양육
- ④ 아동 보호 희망 가정에 위탁
- ⑤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지방자치단체의 장(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비학대의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수행)은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계획,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⁵⁵⁾이 포함된 개별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다. 일시보호조치(제15조 제6항)

2020년 12월 29일 「아동복지법」 개정(2021년 3월 30일 시행)으로 ‘일시보호조치’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이하 “일시보호조치”)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가족으로부터 아동을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4) 보건복지부, 2020 아동분야 사업 안내 1, 5.

55)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관리 계획) 법 제15조 제4항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3.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6. 30.]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와 같이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15조 제5항).

아동일시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적시’에 이루어지고, 원가정양육 원칙이 함께 고려되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제도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세심한 제도의 설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시보호조치가 불필요한 시설 장기보호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으로부터 분리된 가정이 양육환경과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도 더욱 탄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공권력 개입에 의한 아동분리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가. 일시분리조치 확대에 대한 논란

2021년 3월 30일부로 개정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의한 즉각분리 제도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할 가족생활에 과도하거나 임의적인 공권력 개입을 허용할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부모 또는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비단 일시분리조치의 확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아동보호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기존의 법률적(legal)·징벌적(punitive) 관점을 극복하고 아동의 발달과 복리, 가족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여건 등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는 사회·법률적(sociolegal)⁵⁶⁾이고 목적 지향적(goal-driven)⁵⁷⁾인 관점을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과도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아동분리를 포함한 아동보호체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 아동보호 제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단초를 얻고자 합니다.

56) Burns, K., Pösö, T., & Skivenes, M. (Eds.). (2017). *Child welfare removals by the state: A cross-country analysis of decision-making 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p. 12. 아동보호에 관한 문제가 법률적 의사결정 이외에 사회 행정적인 의사결정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이를 '사회·법률적인 의사결정(sociolegal decision-making)'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57) 참고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제1조)을,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다른 국가들의 아동보호 제도 : 아동분리 및 원가정복귀를 중심으로

(1) 영국

아동에 관한 공법적·사법적 조치의 상당 부분을 규율하는 영국 「아동법」(Children Act 1989)은 지역 관제당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부모 등 양육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아동 분리와 아동의 거처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자발적 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우나 아동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심사를 거쳐 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법」은 법원이 가족생활에 대한 의무적 개입의 합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례원칙에 입각하여야 하고, 시의적절하며,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아동보호사건을 관할하는 영국 가정법원(Family Court)은 “사적 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존중”을 규정하는 「유럽인권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8조⁵⁸⁾의 취지를 존중하여 무(無)명령원칙(“No order principle”)에 따라, 아동보호명령이 있는 상태가 없는 상태보다 아동의 이익 관점에서 더욱 낫다는 점이 충족됨을 전제로 응급조치를 포함한 아동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⁵⁹⁾ 한편,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은 법원이 아동의 장기적 거처를 26주 내에 결정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사건의 당사자인 아동이 거처 등에 있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율합니다.⁶⁰⁾

(2) 호주

호주에서 아동보호 업무는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state)와 영토(territory) 정부의 관할과 책임사항입니다.⁶¹⁾ 다만 각 관할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적 의제를 담보하기 위

58)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20). *Guide on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https://www.echr.coe.int/documents/guide_art_8_eng.pdf 제3장 참고.

59) Burns, K., Pösö, T., & Skivenes, M. (Eds.). (2017). *Child welfare removals by the state: A cross-country analysis of decision-making 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p.181.

60) 위의 책., p.176.

하여 연방정부에 의해 ‘호주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적 프레임워크’ (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2020)와 같은 정책이 채택되어 있고,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조기 개입의 원칙, 의사결정 시 아동참여의 원칙이 전국 각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⁶²⁾

호주에서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임상심리사(Clinical psychologist) 등 아동 보호 관련 전문가들로 충원된 주와 영토 정부 소속 아동보호담당관(Child Protection Practitioner)이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가정방문(home visit)을 포함한 조사(investigation)와 평가(psychosocial assessment)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아동보호담당관은 해당 가정에 예방적으로 개입 중인 의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보호담당관이 정부를 대신해 아동법원(Children’s Court)에 아동보호명령 등을 신청하면, 아동법원에서는 아동이 처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 분리라는 최후 수단의 사용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⁶³⁾ 이때 부모 등 양육자는 아동보호담당관의 평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항변할 권리를 보유했으며, 아동에게 역시 필수적으로 변호사가 선임되어 정부 또는 양육자로부터 구분되는 아동의 권익을 변론할 수 있습니다.⁶⁴⁾ 한편, 아동보호담당관은 아동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역시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아동이 상당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원가정 내에 두고 아동보호명령에 따라 부모 등 양육자를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례 개입이 결정되면 아동보호담당관

61)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Child protection overview*.

<https://www.aihw.gov.au/reports-data/health-welfare-services/child-protection/overview>.

62) Australian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8). *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2020*.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families-and-children/publications-articles/protecting-children-is-everyones-business>.

63) 입종의 정도에 있어서는 합리적 판단에 의해 ‘가능성(probability)’이 인정되는 수준이면 족한 것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가령 호주 빅토리아주(Victoria)의 경우 「아동, 청소년 및 가족법」(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t 2005 (Vic)) s.215B & 274 참고.

64) Victoria Legal Aid. (2019). *Representing children in child protection proceedings*.

<https://www.legallaid.vic.gov.au/sites/www.legallaid.vic.gov.au/files/vla-representing-children-in-child-protection-proceedings-guide.pdf>.

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가정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단계, 조사단계에서 사례관리단계로 넘어가는 중간단계 또는 사례관리단계에서 사법심사에 구속되는 일시분리조치가 취해지는데, 이때 아동보호담당관은 해당 가정의 내력 뿐만 아니라 부모 등 양육자의 범죄 및 아동보호 사건 이력, 아동의 연령과 발달정도, 건강상태, 장애 여부, 부모에 대한 애착 유형과 인식 그리고 분리조치 후 거주할 공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아동법원에 신청합니다. 만약 응급조치로서 아동이 원가정으로부터 일시 분리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후적인 사법적 통제가 뒤따르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아동보호명령(protection order)이 내려진 경우 아동법원은 정기적으로 아동과 보호자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명령을 연장하거나 종료 등을 시키는데, 그 심사과정에서 아동보호담당관과 양육자,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를 제공한 사회복지사, 의사와 같은 관련 전문가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른 한편, 부모가 아동의 분리 및 이후 거처 등에 동의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아동 이익을 위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는 각 주와 영토 정부가 범죄기록과는 별도로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관리 이력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기록이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⁶⁵⁾ 이렇듯 호주에서 아동보호 체계는 가족법 또는 형사법 등 다른 법제도와 중첩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목적, 형식, 절차, 방식 등의 다각적 측면에서 위 법들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법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65)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2018). *Australian child protection legislation*. <https://aifs.gov.au/cfca/publications/australian-child-protection-legislation>. 나열된 목록 가운데 'Working With Children'이 포함된 법률이 이를 규율하고 그 요건과 적용범위 등은 각 주와 영토별로 상이합니다.

(3) 미국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서⁶⁶⁾ 중앙화된 아동보호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재한 국가로 평가되며, 아동보호와 관련된 통계를 보면 각 주별로 관련 시스템이나 현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입니다.⁶⁷⁾ 다만, 연방법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1974)은 아동학대와 유기를 정의하면서 이러한 정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위 법률에 따른 지원금을 주 정부들에 제공합니다.

아동 분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방법인 「입양 지원 및 아동 복리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1980)은 가능한 한 아동을 원가정에 머무르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위탁 가정 등에 머물도록 하되 이러한 일시적 조치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해당 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 주 정부가 가정위탁과 관련된 기금을 연방정부로부터 수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서 “원가정 분리를 최대한 회피하고, 분리한 경우 아동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⁶⁸⁾ 미국에서 아동의 원가정분리 절차는 주마다 다른데, 사법심사를 통해 법원이 결정하게 하거나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민간 아동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이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⁶⁹⁾ 참고로 민간 아동보호기관이 아동을 분리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매사추세츠 주 (Massachusetts)의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분리 시 아동보호기관 내 변호사나

66)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 Depository > 1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IND&mtdsg_no=IV-11&chapter=4. 가입국 목록을 보면 미국은 1995년 2월 16일에 서명하였고 2021년 8월 기준 현재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1990년 9월 25일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습니다.

67) Burns, K., Pösö, T., & Skivenes, M. (Eds.). (2017). *Child welfare removals by the state: A cross-country analysis of decision-making 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p. 198.; 한편, 2013년 유니세프 이노첸티 연구소(UNICEF Office of Research - Innocenti)에서 선진국에 거주하는 아동의 복리 수준을 “물질적 복리”, “보건 및 안전”, “교육”, “행동 및 위험” 그리고 “주거 및 환경”의 5가지 요소로 측정하여 발표한 리포트 카드(2013 UNICEF Innocenti Report Card)에 의하면 미국은 29개 OECD 국가들 중 2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https://www.unicef-irc.org/publications/series/report-card/>).

68) 위의 책., pp. 199-200.

69) 위의 책., p. 204.

법원의 직원(intake officer)으로부터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⁷⁰⁾

(4) 독일

독일은 지방 정부가 아동보호 업무에 대한 관할을 가지는데, 비교적 최근 들어 연방 정부 역시 아동이 처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지방 정부의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1990년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가 가정에 개입하고자 하면서 합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1970년대부터 제기되어 온 주장인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이 가정이 처한 어려움에 대응하는 원칙적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최대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아동 복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⁷¹⁾ 이후 여러 변화들을 거쳐 오늘날 독일은 아동보호체계를 비교법적으로 논할 때 ‘복지 지향 시스템(service-oriented system)’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며, 아동보호에 있어 조기개입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⁷²⁾

독일에는 호주나 영국에 존재하는 엄격한 의미의 아동보호명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대신에 가정법원이나 아동보호요원(*Jugendamt*) 등 특정 기관에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당국은 ‘야경꾼(*Staatliche Wächteramt*)’으로서 모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 하에 상당한 위험에 처한 아동(*Kindeswohlgefährdung*)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의 기본권을 얼마만큼 제한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비례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⁷³⁾

70) 위의 책.

71) 위의 책., pp. 89-90.

72) 위의 책.

(5)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복지 지향 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분류되며, 「헌법」 제 104조에서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해 존중받을 권리”를 보유함을 명시하고서, 정부에 “원가정 내에서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보건적 보장”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⁷⁴⁾

노르웨이에서 부모의 동의에 따른 자발적 분리 이외에 가능한 분리 방법으로는 긴급 분리(emergency removal)와 보호명령(care order)이 있습니다. 1992년 제정된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Act 1992)에 따라 설치된 준사법기구인 카운티 사회복지위원회(County Social Welfare Board)는 보호명령을 위한 사전적 심사 권한 이외에도 긴급분리에 관한 사후적 심사 권한을 보유하는 바, 긴급분리의 경우 아동보호기관의 장이 아동을 분리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위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그러면 위 위원회 의장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아동의 부모가 위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변론절차(hearing)를 거쳐 위 위원회가 결정을 내립니다.⁷⁵⁾

노르웨이에서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는 “해악 또는 유기가 발생 가능한 사정”, “원가정에 대한 복지 서비스로써 만족스러운 상태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한 사정”,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가정분리가 필요하고,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다는 점”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⁷⁶⁾

다. 시사점

위의 내용들을 참고할 때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일시분리조치에 더해 도입된 즉

73) 위의 책., p. 91.

74) 위의 책., p. 45.

75) 위의 책., p. 50.

76) 위의 책., p. 46.

각분리 제도는, 아동의 권익 증진 및 부모 지원을 위한 적절한 복지·의료·보건 등 서비스 기반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아동의 원가정 분리’ 및 ‘인신에 대한 통제’라는 중대하고도 복잡한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심사 기준이나 절차, 기간의 제한, 불복절차 등 없이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칫 부모나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9조 제1항에서 “사법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여 원가정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는 아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에게 아동 양육과 발달에 관해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본 협약에서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을 돌보기 위한 기관, 시설 및 서비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향후 사회·법률적인 관점에서 아동 이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기 위한 제도적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절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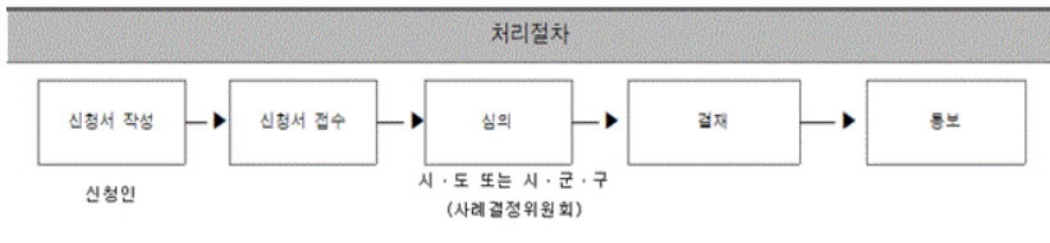
가. 실무상 어려움

국가에 의한 아동보호 기능의 일차적 목표가 원가정기능의 회복을 통한 아동 보호라고 할 때, 공권력 개입에 의한 아동분리의 합법성, 적절성 및 예측가능성 뿐만 아니라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하기 위한 요건과 기준, 절차, 이를 위해 양육자가 취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함께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아동보호 실무상 이러한 부분이 부모 등 양육자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

고, 결과적으로 변호사에게 관련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 실무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나. 법률상 원가정복귀절차

앞서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절차 개관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의 가정 복귀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을 보유하는 바, 양육자가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려면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에 ‘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 ‘가정복귀 계획서’, ‘양육계획서’,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 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3항, 별지 제10호의4서식).



다. 실무에서의 조사과정 및 일반적인 소요기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등 원가정 외 보호기관의 의견을 청취 후 7일 이내에 ‘가정 복귀 점검표’를 활용하여 기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때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있는지 여부,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장애 등이 있는지 여부, 부모의 거주가 일정한지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가정 복귀 점검표’는 이후 시·군·구 사례회의에서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 서비스 제공과정, 가정복귀 점검을 통한 부모의 양육환경 변화 정도와 사후관리 계획을 정리한 ‘종합심사서’, ‘아동 가정 복귀 의견서(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여부 포함) 등과 함께 아동의 보호조치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⁷⁷⁾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대면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 양육자는 앞서 언급된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은 원칙적으로 2일 이내 처리됩니다. 이때 신청서 뿐만 아니라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전부 제출한 시점을 신청서 접수시로 간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⁷⁸⁾ 가정복귀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할 수 있으며, 위 프로그램은 상황에 맞게 4회 이상 실시하고(보호자, 아동, 공통 프로그램을 각 1회씩 실시)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⁷⁹⁾

가정 복귀 점검표

작성일 0000.00.00

| | | | |
|-----------|-----------|-----------|-------------|
| 아동 성명(성별) | 생년월일(연령) | 보호자성명(성별) | 생년월일(연령) |
| 보호유형 | 보호기관(연락처) | 아동과의 관계 | 보호예정 거주지 주소 |
| 보호시작일 | 담당자 | | |

| 번호 | 평가 항목 | 평가 √ | | 특이사항 |
|----|---|------|-----|------|
| 1 |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언어적 폭력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폭력 <input type="checkbox"/> 부부싸움 <input type="checkbox"/> 심각한 갈등 | 예 | 아니오 | |
| 2 |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장애, 신체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지적장애(), 우울(), 기타() <input type="checkbox"/> 신체장애: 장애종류() <input type="checkbox"/> 질환명: | 예 | 아니오 | |
| 3 | 부모 중 최소 1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input type="checkbox"/> 직업: <input type="checkbox"/> 근로시간: | 예 | 아니오 | |
| 4 | 부모의 소득이 안정되고, 부채의 정도가 크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소득: 평균 만원 <input type="checkbox"/> 부채: 만원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여부 | 예 | 아니오 | |
| 5 | 부모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알콜중독 <input type="checkbox"/> 약물남용 <input type="checkbox"/> 도박 <input type="checkbox"/> 기타() | 예 | 아니오 | |
| 6 | 부모의 거주지가 일정하다.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월세: (보증금:) | 예 | 아니오 | |

77) 보건복지부. (2020).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 62.

78) 위의 책., pp. 65-66.

79) 위의 책. 서식 44(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_T_SEQ=360185.

| 번호 | 평 가 항 목 | 평가 v | | 특이사항 |
|------------------------------|---|------|-----|------|
| 7 | 부모의 거주지의 안전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거주예정 가정환경조사 내용 특이사항 기재) | 예 | 아니오 | |
| 8 | 부모는 아동의 분리보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input type="checkbox"/> 연락 주기: | 예 | 아니오 | |
| 9 | 부모는 아동과 재결합하는 것을 원한다. | 예 | 아니오 | |
| 10 |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다. | 예 | 아니오 | |
| 소견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적합성 여부) | | | | |

제6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제도

》 제6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제도

1 형사절차상 피해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

가.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1) 검사의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

검사는 2021. 3. 16.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모든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단, 검사의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선정이 의무사항이 된 것은 2021. 3. 16.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이후이므로, 2021. 3. 16. 이전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검사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피해아동측에서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2) 피해아동 국선변호사의 권한범위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5항).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습니다.

[표4] 국선변호인의 역할

| 아동학대처벌법 | 상세내용 |
|----------|--|
| 제16조 제2항 |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 가능(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가능) |
| 제16조 제3항 |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가능 |
| 제16조 제4항 |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가능 |
| 제16조 제5항 |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
| 제13조 제1항 | <p>사법경찰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신청(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제14조 제2항 | <p>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제19조 제1항 모든 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제14조 제7항 | 임시조치 결과 통지받아 확인 |
| 제22조 제3항 |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 따르지 않을 경우 임시조치 변경 신청가능 |
| 제23조 제2항 |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친권행사/후견인임무 불가 상태가 발생할 경우 임시 후견인 임무 수행할 사람 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가능 |
| 제23조 제3항 | 임시 후견인 임무 수행할 사람 선임에 대한 결과 고지받아 확인 |
| 제36조 제5항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통지받아 확인 |
| 제40조 제4항 | 보호처분이 변경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통지받아 확인 |
| 제41조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종료청구가능 |
| 제47조 제1항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청구가능 |

| 아동학대처벌법 | 상세내용 |
|----------|---|
| | 1.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제한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으로 연락하는 행위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 제47조 제4항 | 가정법원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가능 |
| 제50조 제3항 | 피해아동보호명령 종류 변경 신청 가능 |
| 제51조 제1항 |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연장 청구 가능 |
| 제57조 제1항 |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 변경에 대한 항고 가능 |
| 제57조 제2항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기각에 따른 항고 가능 |
| 제44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경우, 변호인이 대리하여 의견 진술 가능 |
| 제45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에 대한 항고 가능 |

나. 국선보조인

「아동복지법」상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중 또는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1조). 더불어 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에게 신체·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및 기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9조). 즉, 피해아동의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는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보조인으로서 피해아동의 진술 및 활동을 보조하는 등 더욱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 진술조력인

(1) 진술조력인 선정 근거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게도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진술조력인이 피해아동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 「진술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신체적 장애는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는 경우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며, 정신적 장애는 정신박약, 정신지체, 지적발달장애, 자폐증 등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합니다.

단, 위 신체·정신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서적불안, 함묵증, 진술회피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렵다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한 아동의 경우에도 진술조력인의 선정이 가능합니다.

(2) 진술조력인의 업무범위

(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조력인

1) 의사소통 중개(「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취지를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변환하여 전달
- 피해아동의 인지능력, 진술능력, 심리상태 등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를 검찰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지능력, 진술능력, 심리상태 등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설명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

통의 방법, 조사 계획 및 보조수단 등을 논의하거나 조언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얻고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
- 그 밖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조사 전 피해자 면담(「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 피해사실이나 해당 사건 내용 등에 관한 면담이 아니라, 진술조력인의 조력 필요성 여부를 판단

3) 의견 제출(「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진술조력인은 피해아동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가능. 단, 의견에는 피해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또는 사실 관계를 평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불가

(나) 공판단계에서의 진술조력인(「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1조 내지 제24조)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아동은 대부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이므로 진술조력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아동 가까이에 착석하며, 그 역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진술조력인이 선정된 경우 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음
- 2) 법원, 검사, 변호인 및 진술조력인이 협의할 사항 : 증인신문방식, 휴식이 필요할 경우 알리는 방식, 기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의 중개·보조에 필요한 사항
- 3) 신문사항 수정 : 피해아동이 이해가능한 방식으로 수정 요청 가능
- 4) 증인의 진술 중개 : 피해아동의 증언을 소송관계인이 이해가능하게 설명 가능

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를 통하여 준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40조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으로 진술할 경우, 일반적인 형사소송절차와 다르게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6조), 그 외의 기타 절차는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 내지 제84조의8 상의 일반적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절차와 동일합니다.

마. 증거보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로 준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41조에 따라 피해아동이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증인지원시설 운영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로 준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32조에 따라, 현재 법원에는 대부분 증인지원시설이 설치·운영 중이므로, 피해아동 역시 재판전후에 피고인 또는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고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증인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증인지원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절차상 피해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가. 신분조회 등 조치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통하여 「아동복지법」 제22조의 3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개인인적사항과 관련된 증명서 등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가족들에 대한 지원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 등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

다. 비밀전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이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원활히 해당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아동복지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3) 이를 ‘비밀전학’ 제도라 합니다.

비밀전학 신청 등의 각종 서류는 서울특별시의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고,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라.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시설 등에 중장기 분리조치되어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하여 보호하는 경우에 학대피해 아동의 주소노출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주민등록등·초본 열람을 하지 못하도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14호의 3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와 함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의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소의 입소확인서 또는 가정보호심판에서의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등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각 호에 따른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참조).

마.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 상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 6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하여 아동학대와 관련한 민사·가사 등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은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보호시설 입소시, 피해아동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수급권자, 장애인, 정신질환자인 경우 및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 다양한 지원센터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의학·심리적 진단과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2)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센터(21년 하반기 운영예정)

서울시는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아동복지센터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회복을 위하여 집중적인 가족보존 서비스, 부부상담, 가족상담은 물론 각종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를 2021년 하반기부터는 아동학대 예방센터로 확대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각종 피해아동의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3) 스마일센터

스마일센터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진료 및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가족들이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 및 가족들의 상태를 살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 피해아동이 치료를 받는 내용에 대하여 피해아동의 의사를 확인한 뒤 스마일센터에 심리평가 보고서 및 치료 내용 등에 대하여 자료 협조 요청을 하여 피해아동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여 형사절차에서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서울 | 스마일센터총괄지원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8길 6 | 02-333-1295 |
| 서울 | 서울동부스마일센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2길 37 | 02-472-1295 |
| 서울 | 서울서부스마일센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8길6 | 02-332-1295 |
| 의정부 | 의정부스마일센터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578 | 031-841-1295 |
| 인천 | 인천스마일센터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272 | 032-433-1295 |
| 수원 | 수원스마일센터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8 | 031-235-1295 |
| 춘천 | 춘천스마일센터 | 강원 춘천시 동내면 공지로 70-67 | 033-255-1295 |
| 대전 | 대전스마일센터 | 대전 서구 갈마로 139 | 042-526-1295 |
| 청주 | 청주스마일센터 | 충북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112 | 043-218-1295 |
| 대구 | 대구스마일센터 | 대구 수성구 만촌로 148 | 053-745-148 |
| 부산 | 부산스마일센터 | 부산 금정구 금샘로 371 | 051-582-1295 |

| 지역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울산 | 울산스마일센터 | 울산 중구 성안로 218 | 052-707-1295 |
| 창원 | 창원스마일센터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02번길 14 | 055-546-1295 |
| 광주 | 광주스마일센터 | 광주 동구 구성로 163 | 062-417-1295 |
| 전주 | 전주스마일센터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87 | 063-246-1295 |
| 목포 | 목포스마일센터 | 전남 목포시 용당로 3000 | 061-277-1295 |
| 제주 | 제주스마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1길 9 | 064-742-1295 |

사. 의료비 환급(성폭력 피해아동) 및 의료 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의료비는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대리인이 의료비 영수증과 상담사실확인서를 가지고 도·시·군·구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에 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피해로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적 처치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치료비지원, 의약품·의약외품 및 보장구 지원,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검진, 진단 및 치료, 재활치료, 정신건강 교육, 정서발달 등). 특히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2021. 9.부터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하여 고난도 사례 심리치료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학대피해아동 센터에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가 가능합니다.

아. 긴급지원(가정폭력 피해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는 가정폭력 피해가정 구성원 역시 ‘위기상황’의 자로 규정하여 피해자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6조에 상술되어 있고, 각 지원 금액 등은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복지서비스 연계

학대피해 아동의 가정이 빈곤·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읍·면·동 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요청하여 통합적인 복지 지원 요청이 가능한데, 특히 지원 가능한 유관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통합사례관례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여 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차. 주택지원제도(가정폭력 피해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7장

아동학대 유관기관

》 제7장

아동학대 유관기관

1 아동권리보장원

가.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

「아동복지법」 제10조의 2를 근거로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지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지원,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아동보호 서비스에의 기술지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활성화,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 사후관리,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구축,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 주소 및 연락처

| 지역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서울 | 아동권리보장원 |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7층 | 02-6283-0200 |

2 일시보호시설

서울특별시 내에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일시보호시설'은 총 3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대 피해아동은 실무상 이 3곳에 보호되게 되는 것이 현재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 지역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서부 |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 02-385-5600 |
| 동부시립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106 | 02-2248-4567~9 |
| 수서 | 서울아동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광평로 34길 124 | 02-2040-4200 |

3 아동보호전문기관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에 열거된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피해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예방 기관과 학교,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등과의 연계, 가정 기능회복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검사 결과 및 심리 검사 종합평가보고서 등 자료 협조 요청을 하여 피해아동의 현재 심리상태 및 치료 경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주소 및 연락처

| 지역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서울 |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수서동) | 02-2040-4242 |
| 서울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 길 106 | 02-2247-1391 |
| 서울 강서구 |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시정헌빌딩 2층 (가양동) | 02-3665-5183~5 |
| 서울 은평구 |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4 층(응암동) | 02-3157-1391 |
| 서울 영등포구 |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에이스테크노타워 407호 | 02-842-0094 |
| 서울 성북구 |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1층(타운힐빌딩) | 02-923-5440 |
| 서울 마포구 |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신수동) | 02-422-1391 |
| 서울 송파구 |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 송파구 동남로 103, 4층(가락 동, 청송빌딩) | 02-474-1391 |
| 서울 노원구 | 서울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31 | 02-974-1391 |
| 경기 |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25 번길 20(영화동) | 031-245-2448 |
| 경기 의정부 |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4층 (도림빌딩) | 031-874-9100 |
| 경기 성남 |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태평동) | 031-756-1391 |
| 경기 고양 |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 번길 11, 7층(행신동, 삼정프라자) | 031-966-1391 |
| 경기 부천 | 경기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19 골든타 워 3층 302호(중동, 10798-3) | 032-662-2580 |
| 경기 화성 |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4층(봉담읍, 송현빌딩) | 031-227-1310 |
| 경기 남양주 |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204호(금곡동, 다남빌딩) | 031-592-9818 |
| 경기 안산 |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35 | 031-402-0442 |

| 지역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경기 용인 | 경기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 802-804호 | 031-275-6177 |
| 경기 시흥 |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 (대아동, 2층) | 031-316-1391 |
| 경기 평택 |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동방평 택복지타운(소사동) | 031-652-1391 |
| 경기 수원 |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47 2층 | 031-8009-0080 |
| 경기 광명 | 경기광명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 526 신촌농 협 4층 | 02-897-1577 |
| 경기 안양 |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9 7층 | 031-468-9821 |
| 인천 |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주 안동) | 032-434-1391 |
| 인천 서구 | 인천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53, 10 층(이레메디칼센터) | 032-563-0153 |
| 인천 계양구 |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5층 504, 505호(계산동, 삼환1빌딩) | 032-515-1391 |
| 인천 남동구 | 인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간석동) | 032-424-1391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 044-864-1393 |
| 부산 |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 (아미동2가) | 051-791-1391 |
| 부산 해운대구 | 부산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3호 | 051-715-1391 |
| 부산 북구 | 부산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화 명대림타운상가 405,406호 | 051-711-1391 |
| 부산 동구 |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41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503호(범일동) | 051-791-1360 |
| 대구 |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동인 동3가) 2층 | 053-422-1391 |
| 대구 달서구 |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송 현동) 2층 | 053-623-1391 |
| 대구 북구 |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25길 12-1(산격동) | 053-710-1391 |

| 지역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울산 |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성안동) | 052-245-9382 |
| 울산 남구 | 울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23 | 052-256-1391 |
| 광주 |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쌍촌동) | 062-385-1391 |
| 광주 북구 | 빛고을아동보호전문 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97-2 | 062-675-1391 |
| 대전 |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일로 156 (중촌동) | 042-254-6790 |
| 대전 서구 |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135 | 042-716-2020 |
| 강원 |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 35 (후평1동) | 033-244-1391 |
| 강원 강릉 | 강원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강원도 강릉시 솔울로5번길 33 2 층(교동, 반트빌딩 2층) | 033-644-1391 |
| 강원 원주 | 강원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6 | 033-766-1391 |
| 강원 동해 |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20-9 2,3 층 | 033-535-5391 |
| 충청북도 |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 202번길 66-1(울랑동) | 043-216-1391 |
| 충청북도 제천 |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118, 2 층(청전동) | 043-645-9078 |
| 충청북도 옥천 |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19(옥천읍) | 043-731-3685 |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성정동) | 041-578-2655 |
| 충청남도 논산 | 충청남도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84번길 55(취암동) | 041-734-6640 |
| 충청남도 홍성 | 충청남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24-1, 3층 | 041-635-1106 |
| 충청남도 아산 | 충남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고길 79번길 36,601호 | 041-546-1391 |
| 전라북도 |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서서학동) | 063-283-1391 |

| 지역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전라북도 익산 | 전라북도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 (갈산동 185-3) | 063-852-1391 |
| 전라북도 군산 | 전라북도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09, 4층 | 063-734-1391 |
| 전라북도 남원 | 전라북도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향교 동) | 063-6351-1391 |
| 전라남도 |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용 당동) | 061-753-5125 |
| 전라남도 목포 |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 (석현동) | 061-285-1391 |
| 전라남도 나주 |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 3길 28, 4층 (송월동) | 061-332-1391 |
| 전라남도 화순 | 전남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벽라1길 41 2층 | 061-870-7200 |
| 경상북도 경주 |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395번길 24(성건동) | 054-745-1391 |
| 경상북도 안동 |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북 안동시 바람이길 94 | 054-853-1391 |
| 경상북도 포항 | 경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25번 길 12, 3층(대잠동) | 054-284-1391 |
| 경상북도 구미 |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5 3층(송정동 80-1 하나빌딩) | 054-455-1391 |
| 경상남도 창원 |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 로 558(회원동) | 055-244-1391 |
| 경상남도 진주 |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상대동) | 055-757-1391 |
| 경상남도 김해 |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 길 8 2층(부원동) | 055-322-1391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 064-712-1391~2 |
| 제주 서귀포 |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1~2층(서귀동) | 064-732-1391 |

4 학대피해아동쉼터

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역할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제1항 4호 및 제53조의 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 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쉼터는 쉼터 소재지 시·군·구 아동 뿐만 아니라 타지역 아동도 입소 가능하며, 학대 피해아동쉼터는 일반 공동생활가정과는 달리 일시보호 성격의 시설로, 학대피해아동은 쉼터에서 3-9개월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가정복귀·가정위탁·일반공동 생활가정 등으로 전원조치 됩니다. 다만,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거나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계속 입소가 가능합니다.

나. 주소 및 연락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역별로 그 지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과로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5 해바라기 센터

가. 해바라기 센터의 역할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근거로 설립된 시설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법

률·수사지원을 원스톱을 제공합니다.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학·심리적 진단과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도 제공합니다.

나. 주소 및 연락처

[아동 전문 해바라기 센터] - 월~금 09:00 ~ 18:00

| 지역 | 전화번호 | 주소 | 위탁병원 |
|------|--------------|---------------------------------------|----------|
| 서울 | 02-3274-1375 |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구프라자 7층 | 연세의료원 |
| 경기 | 031-708-1375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 분당차병원 |
| 인천 | 032-423-1375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9 한성빌딩 2층 | 가천대길병원 |
| 광주 | 062-232-1375 | 광주 동구 제봉로 57 웰크리닉 4층 | 전남대병원 |
| 대구 | 053-421-1375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40길 32(동인동2가 244-1) 2,3층 | 경북대병원 |
| 충청북도 | 043-857-1375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1층(타운힐빌딩) | 건국대 충주병원 |
| 전라북도 | 063-246-1375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벅크빌딩 2층 | 전북대병원 |

[통합형 해바라기 센터] - 365일 24시간

| 지역 | 전화번호 | 주소 | 위탁병원 |
|-------|---|---|---------|
| 서울 | 본관 : 02-3672-0365 별관: 02-745-0366,0367 | (본관)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 지하1층 (별관)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송빌딩 2층 | 서울대병원 |
| 서울 북부 | 02-3390-4145 |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 삼육서울병원 |
| 서울 중부 | 02-2266-8276 | 서울 중구 을지로 245(을지로 6가 18-79) | 국립중앙의료원 |

| 지역 | 전화번호 | 주소 | 위탁병원 |
|---------|--|--|----------------|
| 경기남부 | 031-217-9117 별관 : 031-215-1117 응급 031-216-1117 | 거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79번길 7, 도병원약국 3층 통합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병원 내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거점 | 아주대병원 |
| 경기북서부 | 통합 : 031-816-1375 응급: 031-816-1374 | (본관)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별관)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 | 명지병원 |
| 경기중부 | 본관: 032-651-1375 별관 : 032-328-1375 | (본관)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부천병원 향설관 지하2층 (별관)경기 부천시 길주로 288, 다운타운빌딩 801호 | 순천향대 부천병원 |
| 부산 | 051-244-1375 | 부산 서구 구덕로 187 부산대학교 병원 융합의학연구동 3층 | 부산대병원 |
| 대전 | 042-280-8436 |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 충남대병원 |
| 울산 | 052-265-1375 |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울산병원 8층 | 울산병원 |
| 강원 서부 | 033-252-1375 |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지하2층 | 강원대병원 |
| 강원 동부 | 033-652-9840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 42 강릉동인병원 별관 | 강릉동인병원 |
| 강원 남부 | 033-741-1896(1899) | 강원 원주시 일산로2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문창모기념관 5층) |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
| 전라북도 서부 | 063-859-1375 | 전북 익산시 무왕로 859 원광대병원 | 원광대병원 |
| 전라남도 | 061-351-4375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265 6층 | 영광기독병원 |
| 경상북도 동부 | 054-278-1375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 성루가관 지하3층 | 포항성모병원 |
| 경상남도 서부 | 055-754-1375 |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층 | 경상대병원 |
| 제주 | 본관: 064-749-5117 별관: 064-748-5117 | 본관: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2층 (연동, 한라병원) 별관:제주 제주시 남녕로 5-3, 3층 | 한라병원 |

[위기지원형 해바라기 센터] - 365일 24시간

| 지역 | 전화번호 | 주소 | 위탁병원 |
|---------|--------------|--|------------------|
| 서울 동부 | 02-3400-1700 |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1층 | 경찰병원 |
| 서울 남부 | 02-870-1700 |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 희망관 2층 | 보라매병원 |
| 경기 북동부 | 031-874-3117 |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본관 3층 | 의정부의료원 |
| 경기 서부 | 031-364-8117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로 10 단원병원 신관 7층 | 단원병원 |
| 인천 동부 | 032-582-1170 |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인천의료원 | 인천의료원 |
| 인천 북부 | 032-280-5678 |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 부산 동부 | 051-501-9117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1층 | 부산의료원 |
| 대구 | 053-556-8117 | 대구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건강증진센터 2층 | 대구의료원 |
| 광주 | 062-225-3117 |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2층 | 조선대병원 |
| 충청북도 | 043-272-7117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48 청주의료원 | 청주의료원 |
| 충청남도 | 041-567-7117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1층 | 단국대병원 |
| 전라북도 | 063-278-0117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지하 1층 | 전북대병원 |
| 전라남도 동부 | 061-727-0117 |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순천성가롤로병원 별관 | 성가롤로병원 |
| 경상북도 북부 | 054-843-1117 |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지하 1층 | 안동의료원 |
| 경상북도 서부 | 054-439-9600 | 경북 김천시 신음1길12 김천제일병원 7층 | 김천제일병원 |
| 경상남도 | 055-245-8117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74 | 마산의료원 |

6 여성긴급전화 1366

가. 여성긴급전화 1366의 역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여성 긴급전화 1366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지원 창구로써, 상담 및 긴급피난처를 제공하며 전문 상담소,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피해여성을 지원합니다.

보호자가 아닌 가정구성원에 의한 아동학대나, 보호자 중 1인이 가정폭력피해자로서 학대피해아동을 동반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센터 내에 피해자 긴급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동반가족까지도 긴급피난처에서 3일 동안 머무를 수 있고,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나. 주소 및 연락처

| 지역 | 주소 | 전화번호 |
|------|-------------------------------------|------------------------|
| 중앙센터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림빌딩 4층 | 국번없이1366 (지역번호)1366 |
| 서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3층 | |
| 경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영통우리빌 가동 303호 | |
| 경기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54-1 | |
| 인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557번길 20, 경인센터 5층 | |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238 | |
|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53-13 해밀센터 내 | |
| 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광주여성발전센터 내 | |
| 대전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28 대전 YMCA 2층 | |
| 울산 |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62 3층 | |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동 1길 13 | |
| 충청북도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충북여성발전센터 내 | |
| 충청남도 | 충남 공주시 무령로 592, 601호 | |
| 전라북도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 |

| 지역 | 주소 | 전화번호 |
|------|----------------------------------|------------------------|
| 전라남도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5층 | 국번없이1366 (지역번호)1366 |
| 경상북도 | 경북 김천시 평화12길 10, 2층 | |
| 경상남도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 179-18 |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6길 23 | |

7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성폭력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가. 성폭력 상담소

(1) 성폭력 상담소의 역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 신고접수와 상담, 긴급보호가 필요한 자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연계,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의 기능을 합니다.

(2) 성폭력 상담소의 운영 현황

우리나라에는 2020년 12월 기준 총 167개소의 성폭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5]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현황

| 합계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167 | 22 | 31 | 5 | 7 | 4 | 7 | 4 | 4 | 2 | 10 | 8 | 17 | 7 | 9 | 11 | 15 | 4 |

이에 대한 상세한 주소와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성폭력 피해 상담소 현황’을 검색하면 매년 업데이트된 주소 및 전화번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역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들의 보호와 숙식제공, 심리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과 취업정보 제공,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동법 제13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현황

한국여성정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 총 34개소가 존재합니다.

[표6]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현황

| 합계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34 | 2 | 5 | 2 | 3 | 1 | 2 | 2 | 1 | - | 1 | 3 | 1 | 2 | 2 | 2 | 2 | 3 |

이에 대한 입소 문의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진행됩니다.

8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 가정폭력상담소

(1)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신고접수, 피해자등 임시보호,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법률지원 등의 역할을 합니다.

(2)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 현황

우리나라에는 2019년 12월 기준 총 208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기]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현황

| 합 계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208 | 35 | 41 | 8 | 13 | 4 | 9 | 5 | 4 | 1 | 11 | 6 | 13 | 8 | 10 | 22 | 14 | 4 |

이에 대한 상세한 주소와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현황’을 검색하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주소 및 전화번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와 역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로, 보호 시설은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 구분됩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피해자 및 동반 가정구성원에 대하여 숙식제공, 심리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정보제공 등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열거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현황

전국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전국에 총 6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시설의 경우 광주 10명, 경기지역에 30명이며, 중장기 시설의 경우 부산 20명, 광주 18명, 경기 10명, 전라북도 11명으로 수용 가능 인원이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표8]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현황

| 합계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 11 | 11 | 1 | 3 | 3 | 4 | 1 | 1 | - | 5 | 3 | 4 | 4 | 4 | 2 | 6 | 2 |
| 일반 | 8 | 11 | 1 | 2 | 2 | 3 | - | 1 | - | 4 | 1 | 2 | 2 | 2 | 2 | 3 | |
| 가족 | 3 | - | - | 1 | 1 | 1 | 1 | - | - | 1 | 2 | 2 | 2 | 2 | - | 3 | 2 |

제8장

특수한 경우의 아동

》 제8장

특수한 경우의 아동

1 이주배경 아동

가. 이주아동의 개념

‘이주배경 아동’은 아동의 국적, 체류자격 등에 관계없이 이주 경험이 있는 모든 아동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⁸⁰⁾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가 정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청소년, 국내로 이주하여 한국어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등 한국 국적이 있는 경우, 아동의 가정환경과 연령 및 발달적 특성에 따른 언어와 문화적 특수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 법·행정의 섬세한 운영이 부족한 현실은 별론으로, 기존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 국적이 없이 한국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능한 법률지원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아동 중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체류자격이 불안정한 이주아동, 한국 국적도 외국 국적도 인정되지 않는 무국적 상황에 있는 이주아동은 사실상 아동보호체계가 차별 없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80) 2013년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제14쪽, 세이브더칠드런

2021년 현재, 한국을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다수의 이주아동들이 한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고, 국민과 동일한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등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가 우선하여 보장되지만(「난민법」 제30조 내지 제38조),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난민아동은 국내법상 출생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누락될 위험도 더욱 커집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단속과 구금·퇴거의 공포로 인하여 적절한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결과 이들 아동에 대한 보호는 더욱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나.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의 어려움

(1) 일반적인 아동학대 관련 신고 및 처리

개편된 아동학대대응체계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에 따른 현장출동은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처분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지자체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 또는 원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아동’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하는 학대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으로서, 부모나 아동 당사자의 국적·인종·사회적 출신·기타 신분 등 전제조건 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이주아동의 경우에 받지 못하는 지원

(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 자격 문제

그런데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절차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는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고, 그 외 「난민법」 제32조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만이 수급권자의 자격이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위기가정인 경우에도 이주아동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아동복지시설 입소의 어려움

한편,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아동양육시설(제52조 제1항 제1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인건비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로서 아동의 생계와 교육을 지원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하는 공동생활가정(제52조 제1항 제4호, 제53조의2)은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이 수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통해 시설을 운영합니다. 즉, 이주아동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데, 이는 시설이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주아동 보호를 거부하는 어려움을 발생시킵니다.

(3)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보호

(가) 이주배경의 아동 보호를 규정하는 법률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대상아동을 한정하고 있지 않듯, 학대피해 이주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는 국적과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본조신설 2014. 1. 28.]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 1. 28.>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나)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정부도 다음과 같이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학대피해 이주아동도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시·군·구의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침을 근거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법적보호절차와 더불어 관할 지자체에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확보 및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⁸¹⁾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국적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처리 요령⁸²⁾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국적, 불법체류, 출생신고 미등록, 무연고 상태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시설 보호아동의)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⁸³⁾

- 1) 공동생활가정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아동 생계비는 기초수급자의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 노력
- 2)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아동 생계비는 보장시설수급자의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⁸⁴⁾

(다)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보호와 출입국관리법

2019년에는 아동학대피해 이주아동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출입국관리법에 신설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아동학대시설을 인지하게 된 공무원이 아동의 체류자격 없음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설된 제25조의4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 제84조가 정하는 통보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및 관계 공무원과 공공·민간시설이 아동의 미등록 상황을 이유로 아동보호의 곤란과 통보 등을 문제 삼는다면, 해당 아동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81) 2021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제2권 제199쪽

82) 2021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제2권 제214쪽

83) 2021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제1권 제162쪽

84) 2021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제1권 제201쪽

한편, 2021년 4월 19일 법무부는 한국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거주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거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의미있는 시도로서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체류자격 부여 대상이 국내 출생 아동에 한정되어 있고, 해외사례와 비교해보아도 유례없이 긴 15년이라는 체류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을 중심에 둔 진정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

-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한다)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9. 4. 23.]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4.3.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1. 28., 2018. 9. 18.>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12. 10. 15.]

다. 이주아동 학대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Q&A

Q. 피해자국선번호 업무를 하면서 이주배경 아동과 소통에 있어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로 인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지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범죄피해자를 위한 ‘제3자 통역 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해아동이나 가족과 상담에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한 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가.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1) 장애인 등록제도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고, 장애수당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등록절차를 모르거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미등록 장애인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나뉘는 대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별됩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사건에서 장애 유형이나 장애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아

등과 교감하고 심층적으로 상담하면서 해당 아동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동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이 되어있는지, 또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외관상 장애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래 장애인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지원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의 장애 상태 등에 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① 장애인 등록신청서와 ② 장애인의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본문).

이렇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한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2) 장애인복지법상 15개의 장애유형

[표9] 15가지 장애유형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 |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 내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정신적 장애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 | 뇌전증장애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 발달 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 정신 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 장애, 일부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등 |
| | | | |

나. 장애 유형에 따른 고려사항

(1) 공통 고려사항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호소통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해당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⁸⁵⁾ 등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지원을 위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의 동행 여부를 확인하여 상담을 하러 오고 현장에서 보조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마중을 나가거나, 이동경로 안내, 이동 공간 확보 등 필요한 점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상담을 하는 공간이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하도록 합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상담을 위한 보조도구(그림카드, 오엑스카드, 숫자카드 등)가 필요

85)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식사보조, 세면도움, 화장실 이용, 옷 입기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세탁 등), 외출지원 등의 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 개인 신변에 가장 긴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이용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한 경우가 있는데, 정식 도구를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O, X 등을 크게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고, 숫자의 경우 주변의 소품(달력, 지갑 안의 지폐와 동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에서 사법기관은 장애인에 대해 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조력의 내용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해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 신뢰관계자와 함께 상담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동석 등 표현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받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조사 받으실 수 있어요”등의 쉬운 표현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리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조력인과 장애아동이 사전에 최소한 10분 이상 대화를 나눠서 진술조력인이 장애인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내용을 이해하는데 수월합니다.

특정 시간에 약속 복용해야 하는 장애아동이 있으므로 약속 복용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장애로 인해 발달이 늦거나 체격이 작아 어려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말은 절대 삼가고, 실제 연령에 맞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목발, 기타 보조기구 등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위치를 옮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장애인의 보조기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신체 일부와 같으므로 함부로 만지거나 분리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시설 내·친족 간 범행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한 자리에서 상담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한다고 할 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시 장애인을 직접 응시하되,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부분에 대한 시선을 자

제하고, 진술을 경청하고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뢰관계자나 의사소통 중개자가 참여한 경우 질문 시 시선을 장애인이 아닌 동석자에게 두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므로 상담이 길어지거나 조사가 길어지면 휴식권 등을 보장받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상담을 하기 전이라도 먼저 휴식이 필요할 경우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먼저 말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컵을 들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부러지는 빨대를 미리 비치해놓으면 편리하게 음료를 음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정적 시각이나 말투, 부적절한 언어사용⁸⁶⁾은 자제하고, 장애인의 호칭과 관련하여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전화연락이나 확대문서로 발송하면 좋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전화 대신 문자 메시지·E-mail 등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각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의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면 되고 무조건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를 제공해야 하는 편견을 지양합니다.

(2) 각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방법

(가)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방문하였을 때 안내자와 동행을 하였는지, 흰지팡이를 사용하여 왔는지, 안내견을 동반하여 왔는지를 확인한 후 각각의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소개를 한 후 악수를 청합니다. 그리고 안내자와 동행하였거나 안내견을 동반하였으면 일행의 앞에서 나아가며 장소를 안내합니다. 흰지팡이를 사용하여 왔다면

86) 가령 “그 몸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만으로도 대단한거예요.” “오죽 이 아이가 불쌍해보였으면 그랬겠어요.” “오늘 상담은 제가 그냥 좋은 일 했다 생각할게요.” “그래도 개는 정상인인데 불쌍한 장애인을 돌봐줘야 제!” 등의 언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필요하다면 흰지팡이를 들고 있다면 흰지팡이의 반대편에서 자신의 팔꿈치를 가볍게 잡게 하고 반걸음 앞에서 안내합니다.

시각장애인은 공간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길을 안내할 때는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5m 가서 왼쪽으로 3m 가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의자를 안내할 때에는 의자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자의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혼자 남겨두고 자리를 잠시 비울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얼마 후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저시력을 가진 장애인이 큰 글씨로 된 신청서식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해당될 수 있으므로 요청에 응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문서를 읽거나 작성할 경우 대필자 또는 대독자를 배정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읽기프로그램(스크린리더)을 통해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서작성, 인터넷 검색, SNS, 쇼핑 등 다양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민원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언어의 사용에 어려움을 가지므로 의사소통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이 문법식 수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농식 수어만 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식 수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인이 필요하고, 농식 수어통역인에게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농식 수어통역인과 문법식 수어통역인의 이중 통역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해당 청각장애인이 어떤 방식의 의사소통을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지 충분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은 주로 수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거나, 간단한 메모 또는

문자를 통해 의사를 주고받습니다.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은 입모양을 보고 대화하거나, 메모 또는 문자를 통해 의사를 주고받습니다.

청각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간단한 수어를 배워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대화를 나눌 때 입모양(발음)을 정확하게 하여 조금 천천히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긴 문장을 사용하여 이야기하는 것보다 단어 위주로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간단한 단어 위주의 문자 또는 메모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 열차시간, 의약품명, 숫자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넷째, 손짓과 몸짓으로 최대한 단어를 표현하여 소통합니다.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기기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제하고, 적당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은 이동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휠체어 또는 클러치와 같은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이동합니다. 자세 교정을 위해 보조기를 착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은 가능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도움을 주기 전에 반드시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과 대화할 때는 첫째, 눈높이에서 대화하기 위해 자세를 조금 낮추는 방법이 좋습니다. 둘째, 외부에서 많은 시간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해를 등지고 앉도록 하거나 더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여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지체장애인이 복도나 길에서 이동할 때에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주어야 합니다. 넷째, 클러치를 사용하거나, 서 있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을 도와줄 때 주의사항〉

첫째,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천천히 밀어주고, 장애인이 가기를 원하는 곳을 물어본 후 밀어야 합니다. 또한, 휠체어는 크기와 발판이 튀어나와 있으므로 지형에 유의하여 이동하고, 패인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출입문과 승강기에서는 휠체어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도록 버튼을 눌러 주거나 문을 잡아주고, 문틈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승강기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먼저 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내리막길 또는 오르막길에서 휠체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휠체어를 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멈추었을 때는 반드시 경사로와 직각이 되도록 하고, 브레이크 장치를 잠금으로 고정하며, 휠체어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심한 경사로를 오를 때에는 지그재그 방식으로 올라가고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휠체어가 부득이하게 계단 또는 턱을 오를 때는 앞바퀴를 들어 올린 후 앞으로 오르는 것이 좋고, 내려올 때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뒤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물어본 후 어느쪽이든 앞바퀴가 들린 상태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또한 심한 경사로를 내려올 때에도 뒤로 내려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지체장애인이 넘어졌을 경우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 사람을 잡지 말고 팔을 내밀어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 자폐성장장애인

자폐성장장애인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반복적인 관심과 행동을 보이며, 일상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자폐성장애와 조현병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조현병의 출현 시기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에 출현하지만 자폐성장애의 경우는 3세 이전에 주로 출현합니다. 또한, 조현병의 주요 증상은 망각과 환각이지만 자폐성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제한적인 관심과 반복적인 행동이 주요 증상입니다.

자폐성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첫째, 최대한 시선을 마주친 상태에서 대화하도록 시도합니다. 둘째, 쉽고 간단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셋째, 분명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태도가 좋습니다. 넷째, 자폐성장애인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

거나 이상한 몸짓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 말과 행동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할 경우 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자폐성장아이에겐 올바른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아주 훌륭합니다.”와 같은 칭찬과 “최고입니다.”를 표현하는 몸짓으로 긍정적 반응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 장애인 수사 및 재판과정 절차 지원제도

(1) 법무부 진술조력인 활용

진술조력인이란 성폭력·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의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한 제도로써, 법무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장애아동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이나 재판과정에서의 증언을 하는 경우, 법률조력 이외에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면 진술조력인 제도를 운영하는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39) 또는 사건을 관할하는 해바라기 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관련자’ 활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장애인관련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등을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도 이러한 장애인관련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와 동석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을 돕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장애인관련자에 대하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

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시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관련자가 있다면 이를 통하여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3) 재판부에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제출

법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을 불문하고, 누구라도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신청하면 그 신청서를 바탕으로 사법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법지원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어통역, 문자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이동을 위한 휠체어 기타 이동을 위한 조치, 이동과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 휴식시간의 보장 등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편의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대법원 사이트 양식을 통해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장애인 등록증이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그 사본은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 및 검사제도 활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국 경찰서 및 검찰청에는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및 검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건의 당사자 혹은 피해자가 발달장애 아동인 경우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미리 정당한 편의를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은 해당 수사관 또는 검사와 소통하면 무난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 자체에 대한 고려가 적극 필요한 사안이라면 미리 해당 관서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또는 검사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조사나 면담 관련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장애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Q&A

Q. 장애인 피해자는 왜 이렇게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않을까요?

A : 학대 원인으로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부족, 의사소통과 신고의 어려움, 성교육의 부족, 순종적인 문화와 같은 요소가 주로 지적되며, 따라서 장애로 인해 자신의 피해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어려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이 주로 학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체·시각·청각장애인과 같이 인지능력 및 의사소통에 큰 제한이 없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학대에 대한 공포와 학습된 무력감, 거주공간 및 동거인의 부재 등을 이유로 피해 장애인들은 그냥 현실을 감내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장애인을 더욱 쉽게 학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학대 사건이 접수되어 실제 조사에 착수하면, 많은 피해 장애인들이 학대당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사건을 처음 접한 담당자는 초기 면담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끈기를 갖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학대에 노출된 장애인에게는, 학대 여부를 알 수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징후는 신체, 정서, 행동, 환경 등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며, 따라서 피해자를 세심하게 관찰한다면 학대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가급적 간결하게 질문하고, 중복된 질문이 한 문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 특성 상, 특정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당시 분위기, 주변적 상황, 주변 인물 등을 환기하도록 하여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장애아동 학대사건에서 아동을 지원하는 다른 기관은 없을까요?

A : 아동학대사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초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해당 공무원의 사례판단 이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비장애아동 사건이 대부분인 상황이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복지법)에 연락하여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대피해자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공공후견인 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러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 복지법으로 의율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항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가령,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학대로 보는 규정이 없으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⁸⁷⁾ 반면 「아동복지법」에서는 음란한 행위를 매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따로 장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매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피해자 대리인은 두 법의 내용을 잘 살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리구성 및 의견 개진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87) 「아동복지법」 제17조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비교하여 참고

3 입양

가. 입양제도 개관

우리나라에서 아동에 대한 입양은 사인(私人) 간 의사 합치에 따라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민법」에 의한 입양과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을 요보호아동으로 하여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양자(養子)가 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으로 구분됩니다.

「민법」상 입양으로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 신분을 획득하면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는 일반양자 입양(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그리고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 신분을 취득하면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는 친양자 입양(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이 있습니다. 성립 요건에 있어 전자는 합의로써 성립하는 반면, 후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입양특례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에 적용되는 반면, 요보호아동이 아닌 아동의 외국 또는 국내로의 입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⁸⁸⁾ 대한민국 내에서

88) 석광현. (2017).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2016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가족법연구* 31(1). 한국가족법학회. p119.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 외국적 요소가 수반된 국제입양에 있어서는 입양 대상 아동이 요보호아동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제사법」이 적용되므로, 양친의 본국법⁸⁹⁾이 입양의 준거법으로서 적용됩니다(제1조, 제43조 및 제44조).

[표10] 우리나라의 입양제도⁹⁰⁾

| 구분 | 일반양자입양 (민법) | 친양자입양 (민법) | 기관입양 (입양특례법) | 국제입양 |
|-----------|--|---|---|--|
| 근거 | 민법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 민법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입양특례법 | 입양특례법 제18조 및 제19조, 국제사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 |
| 성립요건 | 협의로 성립 | 재판으로 성립 | 가정법원의 허가 |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충족 |
| 양자의 성·본 |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종료 |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
| 입양의 효력 |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관계가 발생함 |

89) '본국법'이란 당사자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90)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56&ccfNo=1&cciNo=1&cnpClsNo=1>.

다른 한편, 2021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된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체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종래 보호자 의뢰 및 입양 동의를 거쳐 입양절차가 개시되던 것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 입양기관에서 담당해오던 친생부모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사항으로 이전되면서, 입양절차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원가정 양육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이 필수적 요소로 포함되었습니다.

나. 입양기관의 아동보호에 관한 책무

입양기관은 입양대상 아동의 안전 등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통해 입양대상 아동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21조, 제38조). 이에 따라 입양기관은 입양대상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아동의 인수 시점부터 입양 완료 시까지 아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에 따라 아동 주소지의 시·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으면 시·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미배치 지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 112 번호를 통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20조,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제10조 제2항 제25호, 제63조 제1항 제2호). 입양기관은 신고 후 즉시 아동 학대(의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아동학대행위(의심)자를 대면 상담하며, 신고 또는 사례 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아동학대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입양기관 종사자는 입양을 위한 법원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도 심리 중인 법원에 이를 지체없이 고지해야 합니다.⁹¹⁾ 입양 후 입양기관은 1년간 의무적으로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하여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후관리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후관리 단계에서 입양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를 인지하였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미배치 지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입양 아동 학대 사례개입 및 보고절차에 따라 가정방문, 보고, 조사 협조, 모니터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⁹²⁾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6호로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위와 같은 신고가 있으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제10조 제4항).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입양기관에 자료 제공 등 조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입양기관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에 있어서의 법적 대응 조치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는 앞서 살핀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대응방법을 포함하면서도, 입양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일부 추가로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입양된 아동이 양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어 양부모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아동보호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은 위 절차들로 인하여 아동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사전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1항, 제6항).

91) 보건복지부 & 중앙입양원. 2020 입양실무매뉴얼. 2020. p33.

92) 위의 책. p35.

사선 또는 국선으로 선임된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조사 도중인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2항). 또한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다만, 범죄의 재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아동학대 행위자를 격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도록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만약 판사가 임시조치로서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변호사는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 제2항).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재판부에 촉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52조). 이때 각 보호처분은 병과 가능하며,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릴 때 변호사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3항, 제4항). 만약 아동학대행위자인 양부모의 친권행사를 제한 내지 정지하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 내지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변호사는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 내지 임시보호명령 기간 동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또는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 제52조 제3항).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양자와 검사 등은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 제1항 1호, 민법 제905조 제1호, 제906조). 이때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검사에게 파양 청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되었고, 피해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파양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

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2항). 만약 친생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받기 전까지 피해아동을 위한 법정대리인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친생부모 등을 선임해 달라는 임무대행자 선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5항).

4 출생신고

가. 출생신고되지 아니한 아동

(1)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아동은 사회의 법제도 하에서 보호받는 동시에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의 권리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법제도 하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국가에 아동의 존재가 인지되는 것을 전제로 행사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이자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기본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⁹³⁾ 대법원 또한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에서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⁹⁴⁾

9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1.

94)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결정[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2) 출생신고와 아동학대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공적으로 아동의 존재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제공받는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의 공적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음에 있어 제약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에 있어, 교육당국은 아동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학통지를 할 수 없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및 영유아검진 등 기본적인 보건 및 의료서비스 역시도 보건당국이 아동을 인지하지 않는 이상 제공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보호에 있어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온라인상의 불법입양, 아동매매 등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가지는 어린이집, 병원 등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학대 상황에서 구제되기도 어렵습니다. 가족과 분리된 경우 아동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가족의 결합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미성년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음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연령을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하게 성인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아동을 기본적인 법적 보호 및 각종의 사회서비스 등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아동에 대한 유기 또는 방임이라 할 것입니다.⁹⁵⁾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95)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자 2015고단6538판결

출생신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아 피해아동이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도록 방임한 점

나. 현행 출생신고제도

(1) 출생신고 의무자로서 부 또는 모

출생한 아동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에 따르면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모가 출생신고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출생신고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와 같은 출생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 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출생신고

최근 보도된 여수 출생미신고 아동유기치사사건⁹⁶⁾, 인천 미추홀구 출생미신고 아동 살인사건⁹⁷⁾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1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 현행의 출생신고제도상으로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최소한의 아동 권리향유를 위한 출발점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약점이 확인됩니다. 더욱이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69호의 일부개정을 통해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를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어렵고, 이에 출생 미신고가 알려진 경위의 대부분은 아동학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등 아동의 권리가 상당히 침해되었거나, 이를 넘어 아동의 생명에 상당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의 출생신고는 아동의 권리 침해 발생 이후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의 적극적 실현에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신고의무자)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6) 노컷뉴스, 2020. 12. 9. 자, 냉장고 속 아기, 출생신고 안 돼... "보편적 출생신고제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461778> : 아동학대 방임신고로 조사 중이던 가정에서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개월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

97) 한겨레, 2021. 1. 18. 자, 엄마 손에 숨진 8살 여아...출생신고 안 된 '투명인간'으로 살았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79220.html?_fr=mt2#csidx97bf5e6ad60a53b95d93fa10475b844 : 생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모의 비협조로 8년간이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아동을 친모가 살해하고, 생부가 이를 비판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3) 생부(生父)의 출생신고(사랑이법)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생모가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생부(혼인 외의 자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아동에 대한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 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어, 그 사이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법원을 통한 간이한 절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57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생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한 위 법률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생부의 출생신고를 소극적으로만 허용하였고, 각 법원별로 확립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을 통해 생부의 출생신고의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을 아동 인권적 측면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한 바 있습니다.⁹⁸⁾ 동 조항은 위 대법원 판시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되었습니다.

98)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결정[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취지, 입법연혁,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생부가 단독으로 출생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인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문언에 기재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4) 이주아동 출생등록의 문제

이주민 거주자의 자녀로서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해당 이주민 국적의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각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됩니다. 이주민인 부모는 현재 거주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자녀의 출생사실을 신고할 수는 있으나, 이 때의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가 되고, 이 서류는 특종신고 서류편철장에 편철되어 보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아동과 이주아동의 부모는 출생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리증명서는 아동의 출생과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있을 뿐, 출생신고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증에 불과하여 아동의 출생과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시행규칙〉

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고서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읍·면의 장이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 제1항의 편철장에는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목록을 붙인다.

③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및 혼인신고를 하는 때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결국, 이주아동이 공적인 증명으로서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국내에 가족

동반이 허용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이주민 자국의 법률상의 출생등록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실제 거주 중인 외국인 중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할 수 없는 외국인도 상당합니다. 비숙련 저임금 노동 시장으로 유입되는 E-9 체류자격 소지 이주노동자의 경우 가족의 동반이 불허되므로 자녀인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가 어렵고, 약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단속과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내 체류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지만 공적인 신분이 없는 이주아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적에 따른 아동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향후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의 문제도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모가 법률상 혼인 중인 경우, 혼인 외의 자에 대한 법률상 부(夫)의 친생 추정 문제

친모가 혼인 중인 경우 아동은 친모의 법률상 부(夫)의 자(子)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제1항), 친모의 혼외 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친모가 출생신고를 한 후(「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친생부인 또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전혼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던 「민법」 제844조 제3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되면서, 위 자녀가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모와 전혼의 부(夫)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하여 가정법원의 간이한 허가로서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 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 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친모에게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친모가 법률혼 관계의 파탄에 대한 두려움, 혼인 중의 자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 사생활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생부의 출생신고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 단체장을 통한 직권 출생신고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⁹⁹⁾

다. 아동학대사건 진행 중 출생신고 절차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아동이 발견되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수사의뢰가 들어갈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아동학대의 유형으로서 방임 또는 유기로 보고 수사를 진

99) 2021. 6. 21.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시 의료기관 등을 통하여 즉시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고, 지자체는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최고하며,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 기간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많은 경우의 아동 권리 침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합니다. 수사진행 과정에서 출생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확인이 된다면 출생신고를 독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진행합니다.¹⁰⁰⁾ 부 또는 모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기아(棄兒)로서 시·읍·면장이 가정법원에 아동의 성과 본 창설허가 심판청구를 하고, 아동의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아동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¹⁰¹⁾을 통해 법원에 성과 본 창설 허가 신청과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 결정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고를 통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제3조(기아에 대한 성·본의 창설) ① 시(구)·읍·면의 장은 기아발견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서식 예에 의한 성·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는 면제)를 하여야 한다.

② 기아에 대하여 소지품에 그 성명과 본의 표지가 있는 때에 그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보관 중인 기아발견조서에 첨부하여 이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기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성명란은 빈칸으로 하고, 성별란에는 남 또는 여로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법원의 심리) ① 법원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조사, 확인하여 허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사건본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단 사건본인이 유아이거나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실탐지 회보서, 사건본인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

100)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4항

101) 재판과정에서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자국선변호사로서의 지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지자체와 법원을 통하여 성본창설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필요하므로, 사건담당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자체의 의무를 인지시키고 출생신고를 독려하도록 합니다. 만약 부 또는 모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 또는 모에게 출생신고를 독려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침해를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로서 방임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합니다. 특히, 검사에 의한 직권 출생신고가 가능하므로, 검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아동의 출생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9장

아동권리협약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 제9장

아동권리협약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1 아동권리협약의 의의

가. 아동권리협약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이하 아동권리협약 또는 협약)¹⁰²⁾은 아동 또한 태어남 자체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 마땅하지만, 발달과정에 있는 특성상 미성숙과 부족함을 이유로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아동의 지위를 확인한 국제인권조약입니다. 성인과 다르지 않은 권리의 주체자이자 권리 향유를 위해 특별히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국제인권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아동권리협약 채택은 아동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여 노동이나 징집, 조혼 등 명령을 이유로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관습적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도 분명히 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이를 시행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정하여(협약 제4조), 자국의 관할권 범위를 넘어 전 세계 아동권리 증진에 협력해야 할 공적 책무를 강조한 것은 아동권리협약의 특별한 성과입니다. 현재까지 196개 국가라는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법으로서, 협약은 그 누구보다 많은 국가와 구성원이

102)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고, 1991년 12월 20일 조약 제1072호로 발효되었습니다.

아동권리 보장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점에도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협약이 명시한 모든 아동 권리를 존중(respect), 보호(protect), 실현(fulfill)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¹⁰³⁾

- 비차별의 원칙(제2조)
-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제3조)
- 생명, 생존 및 발달의 원칙(제6조)
- 아동 참여와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

일반원칙은 아동도 동등한 인간이라는 시각에 기초하여, 아동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개념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정기보고서 지침을 통해 비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제3조), 생명, 생존 및 발달의 원칙(제6조), 아동 참여와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을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으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협약의 전반적 해석을 돕고, 당사국이 협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지침이 됩니다. 이러한 협약은 아동의 출생 국가와 지역, 가족상황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존중받으며, 고유의 생명권과 발달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신의 삶에 참여할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전 세계 공동체가 노력해야 할 필요를 말합니다.

이 중 비차별의 원칙은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를 천명합니다.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법정대리인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든

103)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Fact Sheet No. 10 (Rev.1), *The Rights of the Child*, March 1997, No. 10 (Rev.1).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10rev.1en.pdf>에서 2021년 7월 18일 검색)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즉, 아동기의 취약성에 공감하며, 아동기의 특성이 권리 향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차별을 초래하는 조건을 줄이는 기회의 평등과 형평성 있는 결과에 다다르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¹⁰⁴⁾

아동 최상의 이익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 행정기관, 입법기관과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아동이 간과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주목하며, 아동을 중심에 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가장 작은 이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이 중요한 이유는 아동보호에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보호자의 의무를 확인하되, 온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가정환경과 행복,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보호자와 그 가족을 지원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인권조약을 통해 거듭 확인된 인권의 원칙은 가장 취약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무이행자의 역할, 이를 통한 상호존중의 사회를 설명합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은 자원의 활용과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아동에게 부여함으로써, 인권의 선순환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명, 생존 및 발달의 원칙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아동의 고유하고 존엄한 생명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며, ‘가능한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의 발달은 총체적인 개념에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심리적 및 사회적 발달을 포함하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국의 이행조치들은 모든 아동이 최적의 발달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참여와 의견 존중의 원칙은 아동의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연령과 발달 정도를 불문하고, 아동은 개별적 삶을 만들어나가는 당사자로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욕구와 필요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적절한 의사소통을

104) 비차별의 원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8호(1989), 147-149쪽 (HRI/GEN/1/REV/6, pp. 147-149)”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통해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협약 제12조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뿐만 아니라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성인과 사회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강조한 것은 아동사법과 입양, 시설보호 등 특정한 문제에 대한 특정 아동집단의 견해를 확인할 필요를 강조하는 것이며, 이는 삶에 있어 아동의 주인의식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그들로부터 아동권리에 기반한 사회적 변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지향점도 담고 있습니다.¹⁰⁵⁾

이러한 일반원칙은 협약 이행에 필수이며, 4가지 요소가 모두 고려되었을 때 비로소 협약이 정하는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단위에서 아동의 능동적 참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령과 여타 상황에 따른 비차별의 원칙이 지켜지고,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른 정책적 결단과 입법적·행정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달에 대한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었을 때, 정보접근과 의사 표명이라는 행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개별적 권리를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은 일반원칙에 기초하여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2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0년 9월 “아동에 대한 국가폭력”에 초점을 맞춘 일반토론의 날을 통해 모든 신체적 처벌에 대한 금지와 “이러한 영역에서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아동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민감해지도록 하며, 아동에 대한 폭력을 문화적으로 용인하는 것을 해결하고, 대신 폭력에 대한 ‘불용

105) 본문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2003), 제12항 (CRC/GC/5, para. 12)”에 기초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인'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적인 캠페인에 착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¹⁰⁶⁾

2001년 4월, 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에 관한 첫 번째 일반논평을 통해 신체적 처벌은 협약과 양립할 수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아동이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기에, 교육은 아동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징계는 비폭력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¹⁰⁷⁾

또한, 2001년 9월에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일반토론의 날에서 "시급한 문제로서, 가정과 학교에서 훈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을 법제화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¹⁰⁸⁾

앞서 소개한 아동폭력보고서는 2000년과 2001년의 일반토론의 날에 따른 권고를 토대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제적 연구를 요청한 결과이며,¹⁰⁹⁾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일련의 일반논평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특히 제19조, 제28조 제2항, 제37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8호는 그 첫 번째로서,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명시한 협약 조항들을 이해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밝혔습니다.¹¹⁰⁾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8호에서 가정과 학교 및 기타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승인되거나 용인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을 해결하고, 이를 근절하는 것은 사회 내 모든 형태의 폭력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하며,¹¹¹⁾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을 금지하는 법률 제·개정은 변화를 도

106)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에 대한 국가폭력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 25차 회기 보고서(2000), 제668-288항. (CRC/C/100, paras. 668-688)

107)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2001), 제8항. (CRC/GC/2001/1, para. 8).

10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 28차 회기 보고서(2001), 제710-745항. (CRC/C/111, paras. 710-745)

10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제45조 (c)항에 근거하여 유엔 사무총장이 아동권리와 관련된 특정 이슈를 연구하도록 총회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11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8호(2006), 제1항. (CRC/C/GC/8, para. 1)

모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5. 일단 아동에 관한 폭력에 대하여 형법이 완전히 적용되면, 아동은 그들이 어디에 있건, 범죄자가 누구든 간에 신체적 처벌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입장은 신체적 처벌에 대한 전통적인 용인을 고려해볼 때, 적용가능한 분야별 법률(-예를 들어 가족법, 교육법, 모든 형태의 대안 양육과 사법 체제에 대한 법, 고용법-)이 관련 상황에서 폭력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만약 전문가 윤리강령 및 교사, 양육자, 기타 사람들에게 대한 지침, 그리고 또한 시설의 규칙이나 설립 문서가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의 불법성을 강조한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39. 모든 신체적 처벌의 분명하고 무조건적인 금지를 달성하는 것은 다양한 당사국들에서 다양한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교육, 소년 사법 및 대안 양육의 모든 형태를 담당하는 법률의 특정 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형법 규정이 가족 내를 포함한 모든 신체적 처벌에 적용됨을 명백하고 확실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당사국의 형법에 추가적인 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이나 가족법에 모든 신체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한 규정은 부모나 기타의 양육자들이 그들이 형사 소추당한 때에 더 이상 신체적 처벌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합리적'이거나 '알맞은')라는 어떠한 전통적인 변호도 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가족법 또한 부모의 책임에는 아동에게 여하한 형태의 폭력 없이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됨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이후로,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일반논평 제13호를 채택하여, 아동의 발달 및 사회의 비폭력적 갈등 해결을 위태롭게 하는 관행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려면 폭력을 근절하는 조치가 강화되고 확대될 필요를 거듭 확인하였습니다.¹¹²⁾ 폭력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국은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자신의 능력과 경제적 여건 내에서, 그리고 아동의 변화하는 능력(*evolving capacity*)에 맞추어 최적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조력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제18조 및 27조). 나아가 당사국은 자신의 업무상 폭력의 예방,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폭력에 대한 대응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사법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아동의 필요에 부응하고 또한 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8호(2006), 제3항. (CRC/C/GC/8, para. 3)

11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2011), 제3항. (CGC/C/GC/13, para. 3)

관련하여, 한국은 2019년 9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았습니다.¹¹³⁾

-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과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 (d)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 신고를 장려할 것
-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
-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다행히 2021년 1월에는 자녀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8조를 삭제하는 국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권리협약 제19조가 명시한 것처럼 직간접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그로써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아동의 권리를 지지하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성착취 피해아동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사실상 범죄의 책임을 묻던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범죄를 저지를 우려만으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삭제를 제시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도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존엄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형태의 대우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관점을 뒷받

113) 한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제27항. (CRC/C/KOR/CO/5-6, para. 27)

침합니다. 허용되는 폭력은 없으며, 체벌과 학대의 경계도 없습니다.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여 다소간의 변화가 드러나는 현재, 기존의 법률과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특별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나.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한편,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했거나 가정환경에 남아 있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국은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을 보장해야 하고, 이러한 보호는 위탁 양육, 입양, 필요한 경우 적합한 시설에서의 양육을 포함합니다(아동권리협약 제20조).

다만, 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은 적절한 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가정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고려되어야 하며(아동권리협약 제18조), 국가는 대안양육체계에 있는 아동의 배치 결정을 정기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권리협약 제25조).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된 경우에도,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아동권리협약 제9조).

2009년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은 협약의 원칙과 취지를 확인하며, 각 국가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채택된 지침입니다(A/RES/64/14 2). 위 지침은 아동보호를 위한 가정환경의 중요성,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한 한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협약과 지침에 비추어 볼 때,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는 아동보호의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현실을 드러냅니다. 즉, 분리를 고려하기에 앞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가정에 대한 신뢰와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정서적 불안정, 부부갈등과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가정 내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노력이 곧 아동을 중심에 둔 아동학대 대처이자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노력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제도를 통해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가 시작된 현재, 원가정 지원과 기능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은 아동권리를 주류화하는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부록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4/25 of 20 November 1989

entry into force 2 September 1990,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Bearing in mind that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Recognizing that the United Nations has,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proclaimed and agree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therei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Recalling tha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has proclaimed that childhood is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Convinced that the family, as the fundamental group of socie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for the growth and well-being of all its members and particularly children, should be afforded the necessary protection and assistance so that it can fully assume its responsibilities within the community,

Recognizing that the child, for the full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his or

her personality, should grow up in a family environment, in an atmosphere of happiness, love and understanding,

Considering that the child should be fully prepared to live an individual life in society, and brought up in the spirit of the ideal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n particular in the spirit of peace, dignity, tolerance, freedom, equality and solidarity,

Bearing in mind that the need to extend particular care to the child has been stated in the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of 1924 and i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0 November 1959 and recogniz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particular in articles 23 and 24),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particular in article 10) and in the statutes and relevant instruments of specialized agenc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children,

Bearing in mind that, as indicated i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hild, by reason of his physical and mental immaturity, needs special safeguards and care, including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before as well as after birth",

Recalling the provisions of the Declaration on Social and Leg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Foster Placement and Adop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 and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Emergency and Armed Conflict, Recognizing that, in all countries in the world, there are children living in exceptionally difficult conditions, and that such children need special consideration,

Taking due account of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s and cultural values of each people for the protection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chil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 operation for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in every country, in particular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eighteen years unles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hild, majority is attained earlier.

Article 2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to each child within their jurisdiction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irrespective of the child's or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child is protected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r punishment on the basis of the status, activities, expressed opinions, or beliefs of the child's parents, legal guardians, or family members.

Article 3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s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States Parties undertake to ensure the child such protection and care as is necessary for his or her well-being, taking into account the rights and duties of his or her parents, legal guardians, or other individuals legally responsible for him or her, and, to this e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institutions, services and facilities responsible for the care or protection of children shall conform with the standards established by competent authoriti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safety, health, in the number and suitability of their staff, as well as competent supervision.

Article 4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With regard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such measures to the maximum extent of their available resources and, where need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rticle 5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esponsibilities, rights and duties of parents or, where applicable, the members of the extended family or community as provided for by local custom, legal guardians or other person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child, to provid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appropriate direction and guidance in the exercise by the child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6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every child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Article 7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and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is field, in particular where the child would otherwise be stateless.

Article 8

States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to preserve his or her identity, including nationality, name and family relations as recognized by law without unlawful interference.

Where a child is illegally deprived of some or all of the elements of his or her identity,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and protection, with a view to re-establishing speedily his or her identity.

Article 9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child shall not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arents against their will, except when competent authoriti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that such separation is necessary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uch determination may be necessary in a particular case such as one involving abuse or neglect of the child by the parents, or one where the parents are living separately and a decision must be made as to the child's place of residence.

In any proceedings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all interested parties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and make their views known.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who is separated from one or both parents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except if it is contrary to the child's best interests.

Where such separation results from any action initiated by a State Party, such as the detention, imprisonment, exile, deportation or death (including death arising from any cause while the person is in the custody of the State) of one or both parents or of the child, that State Party shall, upon request, provide the parents, the child or, if appropriate, another member of the family with the ess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whereabouts of the absent member(s) of the family unless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would be detrimental to the well-being of the child. States Parties shall further ensure that the submission of such a request shall of itself entail no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person(s) concerned.

Article 10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paragraph 1, applications by a child or his or her parents to enter or leave a State Party for the purpose of family reunification shall be dealt with by States Parties in a positive, humane and expeditious manner. States Parties shall further ensure that the submission of such a request shall entail no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applicants and for the members of their family.

A child whose parents reside in different States shall have the right to maintain on a regular basis,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s with both parents. Towards that end and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paragraph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and his or her parents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and to enter their own country.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restric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public*),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11

States Parties shall take measures to combat the illicit transfer and non-return of children abroad.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conclusion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accession to existing agreements.

Article 12

States Parties shall assure to the child who is 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s the right 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child, the views of the child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For this purpose, the child shall in particular be provided the opportunity to be heard in any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ffecting the child, either

directly, or through a representative or an appropriate bod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cedural rules of national law.

Article 13

The child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the child's choice.

The exercise of this right may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or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Article 14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arents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provide direction to the child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righ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may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ticle 15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s of the child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other than those impo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ticle 16

No child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his or her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unlawful attacks on his or her honour and reputation.

The child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7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t function performed by the mass media and shall ensure that the child has access to information and material from a diversit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especially those aimed at the promotion of his or her social, spiritual and moral well-being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 (a) Encourage the mass media to disseminate information and material of social and cultural benefit to the child and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article 29;
- (b)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roduction, exchange and dissemination of such information and material from a diversity of cultur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 (c) Encourage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children's books;
- (d) Encourage the mass media to have particular regard to the linguistic needs of the child who belongs to a minority group or who is indigenous;
- (e)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the child from information and material injurious to his or her well-being, bearing in mind the provisions of articles 13 and 18.

Article 18

1. States Parties shall use their best efforts to ensure recognition of the principle that both parents have common responsibilities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Parents or, as the case may be, legal guardian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will be their basic concern.
2.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and promoting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render appropriate assistance to parents and legal guardian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and shall ensure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facilities and services for the care of children.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ren of working parents have the right to benefit from child-care services and facilities for which they are eligible.

Article 19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physical or mental violence, injury or abuse, neglect or negligent treatment, maltreatment or exploitation, including sexual abuse, while in the care of parent(s), legal guardian(s) or any other person who has the care of the child.
2. Such protective measures should, as appropriate, include effective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rogrammes to provide necessary support for the child and for those who have the care of the child, as well as for other forms of prevention and for identification, reporting, referral, investigation, treatment and follow-up of instances of child maltreatment described heretofore, and, as appropriate, for judicial involvement.

Article 20

1. A child temporarily or permanent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or in whose own best interests cannot be allowed to remain in that environment, shall be entitled to special protection and assistance provided by the State.
2. States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ensure alternative care for such a child.
3. Such care could include, inter alia, foster placement, kafalah of Islamic law, adoption or if necessary placement in suitable institutions for the care of children. When considering solutions, due regard shall be paid to the desirability of continuity in a child's upbringing and to the child's ethnic, religious, cultural and linguistic background.

Article 21

States Parties that recognize and/or permit the system of adoption shall ensur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nd they shall:

- (a) Ensure that the adoption of a child is authorized only by competent authorities wh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and on the basis of all pertinent and reliable information, that the adoption is permissible in view of the child's status concerning parents, relatives and legal guardians and that, if required, the persons concerned have given their informed consent to the adoption on the basis of such counselling as may be necessary;
- (b) Recognize that inter-country adoption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child's care, if the child cannot be placed in a foster or an adoptive family or cannot in any suitable manner be cared for in the child's country of origin;
- (c) Ensure that the child concerned by inter-country adoption enjoys safeguards and standards equivalent to those existing in the case of national adoption;
- (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in inter-country adoption, the

placement does not result in improper financial gain for those involved in it;

- (e) Promote, where appropriate,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article by concluding bilateral or multilateral arrangements or agreements, and endeavour, within this framework, to ensure that the placement of the child in another country is carried out by competent authorities or organs.

Article 22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a child who is seeking refugee status or who is considered a refuge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or domestic law and procedures shall, whether unaccompanied or accompanied by his or her parents or by any other person, receive appropriate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enjoyment of applicabl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and in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instruments to which the said States are Parties.
2. For this purpose,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as they consider appropriate, co-operation in any efforts by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compete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operating with the United Nations to protect and assist such a child and to trace the parents or other members of the family of any refugee child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necessary for reunification with his or her family. In cases where no parents or other members of the family can be found, the child shall be accorded the same protection as any other child permanently or temporari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for any reason, a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23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a mentally or physically disabled child should enjoy a full and decent life, in conditions which ensure dignity, promote self-reliance and facilitate the child'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2.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disabled child to special care and shall encourage and ensure the extension, subject to available resources, to

the eligible child and those responsible for his or her care, of assistance for which application is made and which is appropriate to the child's condition an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arents or others caring for the child.

3. Recognizing the special needs of a disabled child, assistance extend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whenever possible,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parents or others caring for the child, and shall be designed to ensure that the disabled child has effective access to and receives education, training, health care services, rehabilitation services, preparation for employment and recreation opportunities in a manner conducive to the child's achieving the fullest possible social integration and individual development, including his or her cultural and spiritual development
4.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in the spiri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exchange of appropriate information in the field of preventive health care and of medical, psychological and functional treatment of disabled children, including dissemination of and access to information concerning methods of rehabilitation, education and vocational services, with the aim of enabling States Parties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and skills and to widen their experience in these areas.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24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nd to facilities for the treatment of illness and rehabilitation of health. States Parties shall strive to ensure that no child is deprived of his or her right of access to such health care services.
2. States Parties shall pursue full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and, in particula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 (a) To diminish infant and child mortality;
 - (b) To ensure the provision of necessary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care to all children with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primary health care;
 - (c) To combat disease and malnutrition, including within the framework of

primary health care, through, inter alia, the application of readily available technology and through the provision of adequate nutritious foods and clean drinking-wa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angers and risk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d) To ensure appropriate pre-natal and post-natal health care for mothers;
 - (e) To ensure that all segments of society, in particular parents and children, are informed, have access to education and are supported in the use of basic knowledge of child health and nutrition, the advantages of breastfeeding, hygiene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accidents;
 - (f) To develop preventive health care, guidance for parents and family planning education and services.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with a view to abolishing traditional practices prejudicial to the health of children.
 4.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mote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recognized in the present article.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25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a child who has been plac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care, protection or treatment of his or her physical or mental health, to a periodic review of the treatment provided to the child and all other circumstances relevant to his or her placement.

Article 26

1. States Parties shall recognize for every child the right to benefit from social security, including social insurance, and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2. The benefits should, where appropriate, be granted, taking into account the resources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child and persons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the child, as well as any other

consideration relevant to an application for benefits made by or on behalf of the child.

Article 27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child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child's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and social development.
2. The parent(s) or others responsible for the child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secure, within their abilities and financial capacities, the conditions of living necessary for the child's development.
3.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within their mean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ssist parents and others responsible for the child to implement this right and shall in case of need provide material assistance and support programm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nutrition, clothing and housing.
4.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secure the recovery of maintenance for the child from the parents or other persons having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both within the State Party and from abroad. In particular, where the person having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lives in a Sta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child,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accession to international agreements or the conclusion of such agreements, as well as the making of other appropriate arrangements.

Article 28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education, and with a view to achieving this right progressively and on the basis of equal opportunity, they shall, in particular:
 - (a) Make primary education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 (b)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different forms of secondary education, including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 make them available and accessible to every child,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and offering financial assistance in case of need;

- (c) Make higher education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every appropriate means;
 - (d) Make educational and vocational information and guidanc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children;
 - (e) Take measures to encourage regular attendance at schools and the reduction of drop-out rate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school discipline is administer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hild's human dignity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esent Convention.
 3.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atters relating to education,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elimination of ignorance and illiteracy throughout the world and facilitating access to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and modern teaching methods.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29

1. States Parties agree that the education of the child shall be directed to:
 - (a) The development of the child's personality, talents and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to their fullest potential;
 - (b)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for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c)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the child's parents, his or her own cultural identity, language and values, for the national valu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child is living, the country from which he or she may originate, and for civilizations different from his or her own;
 - (d) The preparation of the child for responsible life in a free society, in the spirit of understanding, peace, tolerance, equality of sexes, and friendship among all peoples, ethnic, national and religious groups and persons of indigenous

origin:

- (e)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the natural environment.
- 2. No part of the present article or article 28 shall be construed so as to interfere with the liberty of individuals and bodies to establish and direct educational institutions, subject always to the observance of the principle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and to the requirements that the education given in such institutions shall conform to such minimum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by the State.

Article 30

In those States in which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or persons of indigenous origin exist, a child belonging to such a minority or who is indigenous shall not be denied the right, in community with other members of his or her group, to enjoy his or her own culture, to profess and practise his or her own religion, or to use his or her own language.

Article 31

-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and leisure, to engage in play and recreational activities appropriate to the age of the child and to participate freely in cultural life and the arts.
- 2.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and promote the right of the child to participate fully in cultural and artistic life and shall encourage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and equal opportunities for cultural, artistic, recreational and leisure activity.

Article 32

-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protected from economic exploitation and from performing any work that is likely to be hazardous or to interfere with the child's education, or to be harmful to the child's health or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or social development.
- 2. States Parties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article. To this end, and having regard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 (a) Provide for a minimum age or minimum ages for admission to employment;
- (b) Provide for appropriate regulation of the hour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Provide for appropriate penalties or other sanctions to ens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resent article.

Article 3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illicit use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s define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and to prevent the use of children in the illicit production and trafficking of such substances.

Article 34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For these purpose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 (a) The inducement or coercion of a child to engage in any unlawful sexual activity;
- (b)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rostitution or other unlawful sexual practices;
- (c)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ornographic performances and materials.

Article 35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the abduction of, the sale of or traffic in children for any purpose or in any form.

Article 36

States Parties shall protect the child against all other forms of exploitation prejudicial to any aspects of the child's welfare.

Article 37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 (a) No child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either capital punishment nor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shall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persons below eighteen years of age;
- (b) No child shall be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unlawfully or arbitrarily. The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of a child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shall be us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appropriate period of time;
- (c) Every child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and in a manner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of persons of his or her age. In particular, every child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separated from adults unless it is considered in the child's best interest not to do so and shall have the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his or her family through correspondence and visits,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 (d) Every child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access to legal and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s well as the right to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 deprivation of his or her liberty before a court or ot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and to a prompt decision on any such action.

Article 38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and to ensure respect for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to them in armed conflicts which are relevant to the child.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3. States Parties shall refrain from recruiting any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into their armed forces. In recruiting among those persons who have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but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eighteen years,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give priority to those who are oldest.
4. In accord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protect the civilian population in armed conflicts,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protection and care of children who are affected by an armed conflict.

Article 39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a child victim of: any form of neglect, exploitation, or abuse; torture or any other form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r armed conflicts. Such recovery and reintegration shall take place in an environment which fosters the health, self-respect and dignity of the child.

Article 40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child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to be trea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motion of the child's sense of dignity and worth, which reinforces the child's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others and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hild's age and the desirability of promoting the child's reintegration and the child's assuming a constructive role in society.
2. To this end, and having regard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ensure that:
 - (a) No child shall be alleged as, be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by reason of acts or omissions that were not prohibit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ey were committed;

(b) Every child alleged as or accused of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has at least the following guarantees:

- (i)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ccording to law;
- (ii) To be informed promptly and directly of the charges against him or her, and, if appropriate, through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and to have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in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his or her defence;
- (iii) To have the matter determined without delay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in a fair hearing according to law, in the presence of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nd, unless it is considered not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his or her age or situation,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 (iv) Not to be compelled to give testimony or to confess guilt; to examine or have examined adverse witnesses and to obtain the participation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his or her behalf under conditions of equality;
- (v) If considered to have infringed the penal law, to have this decision and any measures imposed in consequence thereof reviewed by a hig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according to law;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 (vi) if the child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 (vii) To have his or her privacy fully respected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3. States Parties shall seek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laws, procedures,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specifically applicable to children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and, in particular:

- (a) The establishment of a minimum age below which children shall be presumed not to have the capacity to infringe the penal law;
- (b) Whenever appropriate and desirable, measures for dealing with such children without resorting to judicial proceedings, providing that human rights and

legal safeguards are fully respected. 4. A variety of dispositions, such as care, guidance and supervision orders; counselling; probation; foster care;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s and other alternatives to institutional care shall be available to ensure that children are dealt with in a manner appropriate to their well-being and proportionate both to their circumstances and the offence.

Article 41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ffect any provisions which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which may be contained in:

- (a) The law of a State party; or
- (b) International law in force for that State.

PART II

Article 42

States Parties undertake to make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dely known, by appropriate and active means, to adults and children alike.

Article 43

1.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progress made by States Parties in achieving the realization of the obligations undertaken in the present Convention,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hereinafter provided.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en experts of high moral standing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covered by this Convention.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tates Parties from among their nationals and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s well as to the principal legal systems.
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nominated by States Parties. Each State Party may nominate one person from among its own nationals.
4. The initial election to the Committee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thereafter every second year.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letter to States Parties inviting them to submit their nominations within two months. The Secretary-General shall subsequently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persons thus nominated, indicating States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5. The elections shall be held at meetings of States Parties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t those meetings, for which two thirds of States Parties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6.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if renominated. The term of fiv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fiv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7. If a member of the Committee dies or resigns or declares that for any other cause he or she can no longer perform the duties of the Committee, the State Party which nominated the member shall appoint another expert from among its nationals to serve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ommittee.
8.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9.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period of two years.
10.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be held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or at any other convenient place as determined by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meet annually. The duration of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and reviewed, if necessary, by a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1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12.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ceive emoluments from United Nations resourc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Assembly may decide.

Article 44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submit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reports on the measures they have adopted which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and on the progress made o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
 - (a) Within two year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 (b) Thereafter every five years.
2. Reports made under the present article shall indicate factors and difficulties, if any, affecting the degree of fulfilment of the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Reports shall also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provide the Committee wit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country concerned.
3. A State Party which has submitted a comprehensive initial report to the Committee need not, in its subsequent report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b) of the present article, repeat basic information previously provided.
4. The Committee may request from States Parties fur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5. The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very two years, reports on its activities.
6. States Parties shall make their reports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eir own countries.

Article 45

In order to foste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o encourage international co- operation in the field covered by the Convention:

- (a)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shall be entitled to be represented at the consider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mandate.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competent bodie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provide expert advi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mandates.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to submit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 (b) The Committee shall transmit,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competent bodies, any reports from States Parties that contain a request, or indicate a need, for technical advice or assistance, along with the Committee's observations and suggestions, if any, on these requests or indications;
- (c) The Committee may recommend to the General Assembly to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to undertake on its behalf studies on specific issues relating to the rights of the child;
- (d) The Committee may make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based on information received pursuant to articles 44 and 45 of the present Convention. Such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shall be transmitted to any State Party concerned and reported to the General Assembly, together with comments, if any, from States Parties.

PART III

Article 46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Article 47

The present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8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main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The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9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by such State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50

1.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hat they indicate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2.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when it has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States Parties.
3. When an amendment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it,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any earlier amendments which they have accepted.

Article 51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receive and circulate to all States the text of reservations made by States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A reservation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3. Reservations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at effect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n inform all States. Such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52

A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5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54

The original of the present Convention,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T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유엔아동권리협약¹⁾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0년 10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 발생

전문(Preamble)

본 협약의 당사국은,

유엔헌장에서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의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며, 유엔 체제하의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유엔헌장에서 재확인하고, 충분한 자유 안에서 사회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했음을 유념하고, 유엔이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또는 기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위 선언 및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했음을 인정하며, 유엔은 아동기에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창한 세계인권선언을 상기하고,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발달과 웰빙(well-being)²⁾을 위한 본질적인 환경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본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을 확신하며, 온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아동은 가정 환경과 행복,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유엔헌장이 선언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 받아야 함을 고려하며,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그리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1)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문본은 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재번역 하였습니다('18.12 번역 / '19.3. 수정)

2) 웰빙(well-being)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과 행복, 복지와 안녕을 의미하고, 사회적 의미로는 물질적 부가 아니라 삶의 질을 강조하는 생활 방식을 가리킨다. 본 소책자에서 웰빙은 고유명사의 의미로 웰빙(well-being)으로 표기하며, 문맥에 따라 '행복', '안녕', '복지'의 의미로 해석한다.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명심하고, 아동권리선언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출생 전후 모두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해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념하며, 국내외 가정위탁과 입양문제를 명시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 충돌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이 제시하는 규정들을 상기하고, 세계의 모든 국가에는 특히 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있으며, 이 아동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보호와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아동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실질적 규정)

제1조 (아동의 정의)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더 빠르지 않은 한, 협약이 정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비차별)

- ①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법정대리인³⁾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 ②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대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활동, 표명된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아동 최상의 이익)

- ①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협약 원문의 “legal guardian”은 “법정후견인”으로 번역되나, 본 포켓북은 아동보호의 관점에서 아동의 법률행위 능력을 대리하는 친권자와 후견인, 재산관리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법정대리인”으로 번역하였다. 협약은 부모 외에아동을 보호하는 주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대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의 웰빙에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당사국은 아동 보호나 돌봄에 책임이 있는 기관, 사업 및 시설이 주무관청이 설정한 적절한 직원수 및 숙련된 관리와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안전, 보건분야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 (권리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국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

제5조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른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

당사국은 아동이 본 협약이 명시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또는, 현지관습에 의한 확대가족, 공동체 구성원,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⁴⁾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생명·생존·발달)

-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 ②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출생등록·성명·국적 및 부모에 대해 아는 것)

- 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당사국은 국내법 및 이 분야의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에 근거하여, 특히 무국적 아동을

4) 진화하는 능력(evolutionary capacity)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최초로 소개한 개념으로, 아동의 개별적인 발달과 자율성 증진과 관련한 개념이다. 이는 아동이 눈으로 보이는 능력만이 아니라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가 가진 기본적인 발전 가능한 가능성을 설명한다.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 (신분의 보존)

- ① 당사국은 불법적 간섭없이 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적, 이름 및 가족 관계를 비롯해 아동이 신분을 보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② 아동이 자신의 신원 중 일부나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해당 아동의 신원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 (부모로부터의 분리)

- ① 당사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방임,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 ②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모든 절차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는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③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 모두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 모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④ 아동이 부모 중 한 명, 부모 모두 또는 아동 자신의 구금, 투옥, 망명, 강제 추방, 사망(당사국이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 등과 같이 당사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부모로부터 분리된 경우, 당사국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이 아동의 웰빙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 될 때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의 소재에 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정보제공이 관련된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가족과의 재결합)

- 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가족 재결합을 위해 아동이나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 또는 출국 신청을 했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안이 신청자와 그 가족구성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②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협약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어떤 국가로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며,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다른 권리들과 부합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의 불법 해외 이송 금지)

- ① 당사국은 아동이 불법으로 해외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제12조 (아동의 견해 존중)

- ①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 ②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13조 (표현의 자유)

- ① 아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모든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탐색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 ② 이 권리의 행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 존중
 2.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

제14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①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②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 ③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①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 ② 이 권리의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 어떠한 것도 제한할 수 없다.

제16조 (사생활 보호)

- ① 아동은 그 누구라도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간섭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 ② 아동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정보 접근)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특히 자신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웰빙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다양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1.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2. 문화적, 국내적, 국제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작 교류 보급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3. 아동 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해야 한다.
4. 대중매체가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선주민 아동이 겪는 언어적 필요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5.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여 아동의 웰빙에 유해한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8조 (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 공동의 책임)

- ①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부모 공동 책임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아동 최상의 이익에 기본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 ②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돌봄을 위한 기관, 시설 및 서비스 개발을 보장해야 한다.
- ③ 당사국은 부모가 모두 일하는 상황에서 아동이 아동돌봄시설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 ① 당사국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하는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방은 물론, 학대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의 보호)

- ①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 환경을 박탈당했거나 가정 환경에 남아 있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을 보장해야 한다.
- ③ 이러한 보호는 위탁양육, 이슬람법의 카팔라(Kafalah)⁵⁾, 입양, 필요한 경우 적합한 아동보

5) 카팔라(Kafalah)란, 아랍어로 "다른 아동을 돌보는 것"을 뜻한다. 이는 회교도국가들의 수양자제도를 의미하며

호시설에서의 양육을 포함한다. 대안 양육을 모색할 때는 아동양육이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21조 (입양)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또한,

1.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해 오직 권한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관계당국은 부모나 친척,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아동의 법적 신분 및 필요한 경우, 상담 등에 기초한 관계자들의 입양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여야 한다.
2. 국외입양은 아동이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을 찾지 못했거나 또는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도 아동의 출신국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안적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3. 국외로 입양된 아동도 국내입양 사례에 적용되는 안전보호 기준을 동등하게 향유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4. 국외입양의 경우, 입양알선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적절한 경우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해 본 조항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체계 안에서 아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입양알선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난민 아동)

- ① 당사국은 아동이 난민 지위를 요청하거나 적용가능한 국제법이나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여겨지는 아동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본 협약 및 해당 국가의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족질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법제도에 의해 보충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닌 수양부모와 수양자의 관계로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다양한 아동보호 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아동인권센터(2017) 일반논평12호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할 권리 참고)

- ②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유엔 및 유엔과 협력하는 권한 있는 정부간 기구⁶⁾ 또는 비정부기구들이 이러한 아동을 보호·지원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난민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 추적에 기울이는 노력에 적절히 협조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장애 아동)

- ①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이 그들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을 촉진하며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장려하는 여건에서, 충분하고 품위있는 생활을 향유해야 함을 인정한다.
- ② 당사국은 특별한 돌봄을 받을 장애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아동과 그들의 양육자에게 아동의 여건과 부모 및 기타 양육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③ 장애 아동의 특별한 욕구를 인식하며, 본 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경우 부모나 기타 양육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 아동이 가능한 사회적 통합, 문화적 정신적 발달을 포함한 개인의 발달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동이 교육 훈련, 의료 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여가 기회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④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이러한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확대하기 위해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비롯해 예방의학 및 의학적 심리적 기능적 치료 분야에 관한 적절한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24조 (아동의 건강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 ①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란, 정부간 국제기구 또는 단지 국제기구라고도 하며 국가가 개별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 목적을 국가간의 기구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적 측면의 목표가 있다. 국제연합(UN) 또한 대표적인 정부간 기구이며, 그 외 국제난민기구(UNHCR),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UNESCO) 등이 있다.

- ②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영유아 및 아동의 사망률 감소를 위한 조치
 2. 일차보건의료의 증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수적인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3. 일차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환경오염의 위험과 피해를 고려하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과 충분히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식수 제공을 통해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4. 산모에게 적절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5.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이 아동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장점, 위생 및 환경 정화, 사고 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교육,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6.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부모교육 및 가족계획 교육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조치
- ③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25조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를 해야 할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돌봄, 보호,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배치결정된 아동이 그들에 대한 처우 및 결과와 관련한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제26조 (사회보장제도)

-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양육책임자의 재원과 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아동이 직접 또는 대신 하여 행하는 혜택 신청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

-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② 부모 또는 그 외 아동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 ③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자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그 외 아동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 물질적 지원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④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그 외 아동에 대해 재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해 재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동과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협약 가입이나 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제28조 (교육)

- ①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기회균등에 근거하여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2. 일반 및 직업교육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 도입 및 필요 시 재정적 지원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침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학교 출석률 및 중퇴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본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기여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 및 현대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부문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제29조 (교육의 목적)

- ① 당사국은 아동 교육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1. 아동의 인격, 재능,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
 2.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3. 아동의 부모와 아동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서로 다른 문명의 차이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4.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선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5.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 ② 교육기관의 교육은 국가가 설정한 최소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요청 하에, 본 조 또는 제28조의 어떤 조항도 개인 및 단체의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30조 (선주민 및 소수인종 아동의 고유문화 향유)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선주민 아동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생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1조 (휴식·놀이 및 여가)

- ① 당사국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 ② 당사국은 문화 예술 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제32조 (아동 노동)

- ① 당사국은 경제적인 착취를 비롯해 아동에게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②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기타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1.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 규정
2.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3. 본 조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 규정

제33조 (약물 남용)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4조 (성 착취로부터의 보호)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 착취와 성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1.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성적 활동에 관여하도록 아동을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성매매나 기타 불법적인 성적 활동에 아동을 착취하는 행위
3. 음란한 공연 및 그 소재로 아동을 착취하는 행위⁷⁾

제35조 (아동 유괴·매매 및 거래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어떠한 목적과 형태로든 아동탈취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 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6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영역에 해로운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7) 구체적인 해석·실시에 관한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부속문건인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참고할 수 있다.

제37조 (범죄에 연루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조치)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1. 어떤 아동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2. 어떤 아동도 불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구속 및 구금은 법률에 따라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단 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
3.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그 들 나이의 욕구를 고려한 방법으로 처우받아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과 분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서신과 면회를 통해 가족과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4.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적 및 기타 적절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받을 받을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에서 자신의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무력충돌에서의 아동 보호)

- ①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 있는 무력충돌⁸⁾에 있어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무를 진다.
- ② 당사국은 만 15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당사국은 만 15세 미만 아동의 징집을 삼가야 한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을 징집하는 경우 최연장자부터 징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무력충돌에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무력충돌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구체적인 해석·실시에 관한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부속문건인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참고할 수 있다.

제39조 (피해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방임, 착취, 학대, 고문,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충돌로 인한 아동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는 아동의 존엄성, 자기 존중 및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0조 (소년사법)

- ① 당사국은 형법 위반의 혐의를 받거나 기소 또는 유죄가 인정된 모든 아동이 타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심을 강화하고 아동의 연령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 맡게 될 발전적인 역할의 바람직성을 고려하는 등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처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② 이 목적을 위해 국제규범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형법 위반의 혐의를 받거나 기소 또는 유죄로 인정받지 않는다.
 2. 형법 위반의 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보장받는다.
 - 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아야 한다.
 - 나. 피의사실에 대한 변론 준비와 제출에 있어 직접 또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속하게 법률적 지원을 비롯한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 다. 법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아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지체없이 판결을 받아야 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아동의 연령이나 상황,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라.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 받도록 하는 것과 대등한 조건으로 자신을 대변할 증인의 출석과 심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마.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판결 및 그에 따른 모든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위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 바. 아동이 사법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 통역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사.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완전히 존중되어야 한다.
- ③ 당사국은 형법 위반의 혐의를 받거나 기소 또는 유죄가 인정된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1.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2.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인권과 법적 보호가 온전히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루는 조치
- ④ 아동의 웰빙에 적절하고 아동이 처한 상황 및 위법행위에 맞는 처우를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해 돌봄,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위탁양육, 교육 및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기타 대안적 방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해야 한다.

제41조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규정)

협약은 아동권리실현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규정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당사국의 법
2. 당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2부(이행과 모니터링)

제42조 (협약을 널리 알릴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본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

제43조 (아동권리위원회)

- ① 본 협약의 의무 이행에 관해 당사국이 달성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해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 ② 위원회는 본 협약이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명망 높고 능력을 인정 받은 18명의 전문가⁹⁾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균형 있는 지역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 국민 중에서 선출¹⁰⁾되며, 개인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들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 1인을 위원 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초 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되며, 이후 2년마다 실시된다. 매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이전에 유엔사무총장은 2개월 내에 후보자를 지명해 제출하라는 서한을 당사국에 발송한다. 사무총장은 지명된 후보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고 어느당사국이 이를 지명했는지 작성해 협약 당사국들에게 제시한다.
- ⑤ 선거는 유엔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결정족수로 하며, 회의에 출석해 투표한 당사국 대표들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 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임될 수 있다. 단,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해 추천으로 선정된다.

9) 초기에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나 2003년부터 위원회는 18명의 전문가로 증원하여 구성되고 있다.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placing the word “ten” with the word “eighteen”. The amendment entered into force on 18 November 2002 when it had been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128 out of 191).

10) 위원은 개인의 능력으로 활동하며, 국가에 의해 선발되었지만 그들은 국가 및 특정 기관을 대변하지 않는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양희 대표(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 최초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활동하였으며, 2007-2011년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 ⑦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특정 이유로 인해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 ⑧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 ⑨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사무관을 선출한다.
- ⑩ 위원회 회의는 통상적으로 유엔본부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서 매년 개최된다.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본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되고 검토된다.
- ⑪ 유엔사무총장은 본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 ⑫ 본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유엔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국가의 아동권리이행 보고 의무)

- ① 당사국은 본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 실현을 위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행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제출한다.
 - 1.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 2. 그 후 5년마다
- ② 본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본 협약의 의무 이행 단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 관한 포괄적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③ 위원회에 첫 통합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따라 제출할 후속보고서에 이미 포함된 기초 정보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 ④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제출한다.
- ⑥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시민사회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5조 (협약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본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1. 전문기구,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및 기타 유엔기관들은 본 협약 중 그들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 이행과 관련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게 각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 협약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기타 유엔기관들에게 그들의 활동 분야에 한해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이 보고서에 기술적 자문 지원 요청 또는 그 필요성을 명시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요청이나 명시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관련있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기타 권한있는 기구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아동권리와 관련된 특정 이슈에 대해 연구해 줄 것을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¹¹⁾
4. 위원회는 본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해 접수한 정보에 기초해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해당 논평과 함께 모든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된다.

11) 200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치, 경제, 문화적 여건이나 교육수준 등에 관계없이 전세계적으로 아동들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유엔총회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전세계적으로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조사(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7/90 of 2002)하도록 하였고,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관한 심층연구가 진행되었다. '유엔아동폭력보고서'(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는 2006년 유엔총회에서 코피아난 사무총장에 의해 발표되었다. (국문번역본은: 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3부(협약과 관련한 기타 정보: 부칙)

제46조 (서명)

본 협약은 모든 국가가 서명하도록 개방된다.

제47조 (비준)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48조 (가입)

본 협약은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가입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49조 (발효)

- ① 본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②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해, 본 협약은 해당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에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개정)

- ①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이를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 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안은 동 회의에 출석해 표결한 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되며 승인절차를 위해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총회에 의해 승인되고, 당사국 3분의 2이상이 찬성 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발효된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다른 당사국은 계속해서 본 협약의 규정 및 당사국이 받아들인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만 구속된다.

제51조 (유보조항)

- ① 유엔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 당사국이 유보조항의 문서를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에 배포한다.
- ② 본 협약의 목적 및 목표와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유보조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통지문을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해야 한다. 유보조항 철회 통지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52조 (탈퇴)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본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협약 탈퇴는 사무총장이 통지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된다.

제53조 (수탁자)

유엔사무총장은 본 협약을 보관하는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기탁)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본 협약의 원본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에 서명한 전권위임대표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했다.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 | |
|-------------|---|
| 발행일 | 2022년 2월 |
| 발행인 | 회장 김 정 욱 |
| 발행처 | 서울지방변호사회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서초동, 변호사회관) |
| 전 화 | 02) 6200-6200 |
| 홈페이지 | https://www.seoulbar.or.kr |
| 인쇄처 | 경성문화사 (02-786-2999) |

* 비매품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서울지방법변호사회
Seoul Bar Association